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

| 정성분석팀 12개국 보고서 |

일본의 경제안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정성적 분석

1. 개관

일본이 아직은 세계 3위 수준인 경제력을 감안할 때 일본의 경제안보는 국제사회에, 특히 아시아의 주변국들에게 큰 여파를 미칠 것이다. 근대사에서 일본은 그것을 부정적인 충격으로 이미 보여주었다. 그 여파를 긍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일본 사람들 자신의 과제이자 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특히 한국은 그 역사적인 인연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안보 문제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물론 지금은 한국이 일본에게 주는 영향도 크다. 그것이 안정적 한일관계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다.

경제안보는 일반적으로는 경제력을 주권을 수호하거나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위해 경제를 안전하게 유지·발전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경제안보는 1)자연조건, 2)정치사회적 조건, 3)국제적 환경, 4)대외 의존도, 5)군사력 6)인간 안보(human-dimension security), 7)대외적 영향력 등의 다양한 안보적 조건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일본의 경제안보 영역에서 그 조건들은 서로 교차하면서 작용한다. 특히 정치사회적 조건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독특한 개인적·사회적 심리적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 조건들을 언제나 불확실한 변수로만 인식한다. 그 변수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삶의 조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 변수나 그로 인해 발생한 조건이 반대로 부정적 요인이 되고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어떤 조건이 다른 조건들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조건들의 영향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항상 “애매하게(ambiguously)” 행동한다. 그것은 불투명하게 모호한 의미(vague)라기보다는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양다리 걸치는’ 의미에 더 가깝다. 그래서 가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두 마리를 다 놓치는’ 경우도 있다.(상세 특성은 뒷부분의 II. 참고의 <4. 일본인과 일본사회의 독특한 특성>을 참고 바람)

이러한 분화된 개념의 안보적 조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안보능력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이 각각 뚜렷이 구분되면서 서로 교차하고 있다. 상호 모순적이고 상충적인 것이 동시에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적인 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정책과 그 현상은 “특별하다(exceptional)”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 “특별함”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볼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때로는 그것이 후진사회적 성격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 “특별함”의 작용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대외적인 조건이다. 대내외적인 환경이 좋으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해악으로 작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함”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적 현상의 문제점이 노골적으로 노출되기 전까지는 외부세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안보의 개념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해할지, 그리고 일본의 사회적 특성이 정치와 경제활동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안보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투명한 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본고에서 “비교적”이라는 비교 개념 용어는 한국이나 기타 개도국과의 비교가 아닌 G7 또는 EU수준의 선진국 또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초강대국과 비교를 전제로 한 것이다.



2. 강점

일본의 경제가 확장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평화적인 대외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시대에는 일본의 이러한 역사적, 사회심리적 특성들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일본사회의 장점으로 표출된다. 국민의 단결이나 낙관주의, 국제평화와 협력주의 그리고 인도주의, 법치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질서의식,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 등으로 나타난다.

1) 자연조건

산업화 단계 이전에는 쌀농사를 비롯한 농업에 적합한 기후로 농업생산성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일본은 한국보다는 유리한 자연조건이다.

2) 정치사회적 조건

고대 신화로부터 하나의 왕조로 계승되어 온 천황을 최고의 정치 수반으로 하고 천 년 가까이 사무라이(무사)계급이 정치를 독점해 왔다. 19세기 말 메이지유신을 거치면서 형태적으로는 입헌민주주의제도로 변신했으나 본질적으로는 과거의 천황과 귀족 중심의 과두적 권력체제가 그대로 그 정치체제의 골격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사회적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은 국가의 지도에 충실히 순응하기 때문에 정치지도력의 질이 좋다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다. 위기가 닥쳐도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1945년 패전 후 미국에 의해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어 입헌군주제적인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착되었다. 1945년 10월에 점령당국(GHQ)은 이미 ‘시민적 자유에 관한 지령’과 ‘헌법 자유주의화’ 지령이라는 초기 두 가지 지령을 발표하였다. 천황 히로히토는 46년1월1일 소위 “인간선언”을 발표하였다. 미국이 마련해 준 신헌법의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이 있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고 규정하여 천황은 ‘상징 천황’이 되었다. 일본의 정치에서 천황은 여전히 정치적이 혼란이 극단적인 위기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일정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는 헌법 개정 논쟁이 계속되어 왔으나 이제까지 개정된 적은 없다. 특히 2012년 2차 아베 정권이 본격적인 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020년 아베 총리의 퇴임시까지 실현하지는 못했다. 국회는 임기4년 465인 정원의 중의원과 임기 6년 248명 정원의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리는 중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일본의 정치·사회는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원리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서구적인 성숙한 민주주의체제로 간주된다. 물론 국민개개인의 정치인식 수준과 그에 따른 선거의 질, 정치인의 세습 경향 등의 한계가 지적되지만 일반적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인 가치가 정치에 구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과 소득격차 해소, 복지 등 사회안전망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어 사회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전후 일본의 정치는 1955년 이후 통합된 보수세력이 주축이 되는 자민당이 거의 70년 이상 일당지배체제로 유지되어 왔다. 1955년 1980년초까지 기시-이케다-사토-다나카-미키-후쿠다-오히라-스스키 총리를 거치며 일본이 제2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1980년대 전후정치의 총결산(신우파 전환)을 내걸고 집권한 나



카소네 총리가 1982년부터 87년까지 5년 간 집권했다. 나카소네의 후임인 다케시다 총리가 1년6개월만에 리쿠르트 스캔들로 사임한 이후 1년 내외의 임기를 채우는 총리들이 난립하다가 2001년 고이즈미 총리가 집권하여 2006년까지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였다. 이후 아베1차 내각을 포함하여 1년짜리 정권이 이어져오다가 2012년 아베가 두 번째로 총리로 집권하면서 2020년까지 9년간 일본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역임후 퇴진하였다. 비록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새로 결성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 민주당의 하토야마-간-노다 총리가 각가 1년씩 집권한 적이 있었으나 민주당도 자민당을 이탈한 보수세력이 결성한 정당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권교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베의 퇴진후 아베정권의 관방장관인 스가가 1년간 총리 역임후 2021년9월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집권했다.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가 암살당함으로써 일본 정치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8월 시행된 중의원총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다시 압승함으로써 기시다 총리가 일단 안정적으로 2차 내각을 출범시켜 일본의 정치를 이끌고 있다. 아베 사망 후 자민당 내 각 파벌 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따라 기시다 정권의 안정적 장기 집권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 자민당은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가 모체인 공명당과 연합하여 연합정권을 결성하여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절대안정적인 우위를 점하는 지배정치세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정치는 늘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이 이념적으로 급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대외정책에서도 친미적 외교노선이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일본 특색의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 인권의 존중, 법치가 이루어지는 서구적으로 개방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19세기 말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실현했다. 일본의 민주주의의 질이 어떻고 침략적인 대외정책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근대 일본이 아시아에 서구문명이 정착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근대 한자용어는 일본이 서구 언어로부터 최초로 한자로 번역한 용어이다. 역사 갈등의 논쟁 속에서도 그러한 일본의 문화적 공헌은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일본사회는 거의 모든 방면에서 민주주의적인 개념과 절차가 충분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라고 평가된다. 일본의 치안은 안전하고 국민은 친절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일본사회는 일견 하나의 통일된 동질사회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지방문화적 특색이 있다. 특히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하나의 민족국가로 통합될 때까지 도쿠가와 막부 시대 200여년 간 각 다이묘(大名)가 사실상의 자치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280개 이상의 사실상의 지방 소국인 번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다양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것이다. 에도(현 도쿄)와 오사카를 제외하고는 각 지역은 식량을 자급하는 독점적 경제안보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영지의 규모에 따른 쌀의 생산규모와 무역이익 등 경제력의 격차는 있었으나 법적으로는 막부의 통치자인 쇼군 아래에서 평등한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한 전통이 오늘날 잘 갖추어진 일본의 지방자치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47개 도(都)·도(道)·부(府)·현(縣)과 1,718개의 시(市)·정(町)·촌(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일본은 지방문화(localism)가 세계에서 가장 잘 확립된 나라 중의 하나이다. 세계유수의 수준에 이른 지방 대학이나 지방병원도 많다.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지방 대학의 연구소 소속이었다. 한국과 일본이 수도권 서울과 도쿄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지방도시와 지방도시, 농어촌과 농어촌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훨씬 더 부유하고 잘 정비되



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3) 경제

일본은 지난 1990년 이후 30년간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 침체시기를 거치면서 2010년 이후 중국에 2위 자리를 빼앗겼지만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력(GDP)을 가진 경제 강국이다. 1980년대 이후 2010년까지 일본은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었다. 국제무역 규모, 과학기술 수준, 엔화의 저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적 교환성 통화인 엔화는 여전히 위험회피 자산의 지위를 유지한다. IMF와 세계은행은 물론 OECD와 WTO등 전후에 설립된 거의 모든 다자국제기구에서 일본은 미국에 이은 제2의 출연국, 제2의 출자국, 그리고 제2의 기여국이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은 일본에도 해당된다. 그 3대를 ‘얼마나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가’는 물론 일본인 자신, 특히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의 과제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근대 시장경제가 가장 일찍부터 발달한 나라였다. 에도시대 또는 도쿠가와 막부 시대(17세기 초-19세기 말. 에도는 현재의 도쿄)에는 인구와 경지면적, 생산량 등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했다. 식량의 잉여를 바탕으로 일찌감치 물류가 활발하였고 화폐가 폭넓게 유통되었다. 화폐와 재화의 순환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회 각 계층이 경제적 기회를 잡아서 부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정치권력과 경제력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현대적 의미의 재정의 역할이 일본의 전통적인 상업경제 체제가 기초를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280여개 번의 영주(다이묘大名)들은 대체로 영지 쌀 생산량의 50%-70% 정도를 연공으로 거두어들였다. 그 수입의 대부분은 영지가 아니라 에도에서 소비되었다. “참근교대제”에 따라 영주들은 1년씩 번갈아 가며 에도와 영지를 오가며 거주해야 했다. 에도에 있는 대규모 저택과 가솔들을 유지하는 비용과 매년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왕래하는 교통비용으로 영주의 연공 수입의 60%-80%를 지출했다. 에도와 길에 돈을 뿌린 것이다. 주요 교통로의 여관업과 에도의 소비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된 것은 그런 재정지출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에도는 세계 최대의 소비도시가 되었고 오사카와 에도로 연결되는 근대적인 유통망이 형성될 수 있었다. 물론 영주의 근거지인 영지에는 화폐에 의한 수요를 갖는 소비집단인 “조카마치(城下町)”가 출현하였다. 전국에 200개 이상의 지방경제중심지가 형성되는 것이다.

근대화 이전 시대에 이미 금·은을 기준으로 하는 화폐제도가 정착되어 각 화폐의 수급과 신용관계로부터 시장가격이 성립되었다. 관동에서는 금, 관서에서는 은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미 화폐의 교환비율, 즉 환율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일찍부터 환전상이 번창했다. 현대 일본의 재벌을 대표하는 미쓰이(三井)가문은 원래 오사카의 환전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막부는 연공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추가 지출이나 재정적자 보충을 위해서 종종 화폐개주(改鑄)를 통해서 세입을 확보하였다. 그것을 현대 화폐금융이론에서 개주이익금(seigniorage effect)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주는 귀금속의 함유량을 줄여가는 악주(惡鑄)였다. 그로 인해 일본인들은 ‘인플레이션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이미 16세기부터 국제무역에서 금과 은이라는 교환성 통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교환 비율의 변화나 차익이 가져오는 손익을 깨달았다. 당시 일본은 세계 은 생산량(약 40-50톤)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일본의 은 수출이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한 화폐 관리의 경험에 따라 19세기말 미국과의 개항 협상을 할 때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이미 16세기 혹은 그 이전부터 경제적 가치의 실현이 행동의 기준이 되고 전국적인 상품유통망이 형성되면서 경제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로 경제사회의 성립이었다. 환과 어음이 사용되면서 신용체제가 정비되었다. 18세기에 이미 오사카에서 쌀의 선물환시장이 형성되었다. 메이지유신 시기에 정리된 다이묘들과 유력 가신들은 모두 막대한 국채로 그 특권의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이 일본의 초기 은행이 창출하는 상업자본이 되고 철도와 중공업 발전에 투입할 수 있는 산업자본이 되었다. 그만큼 일본의 경제저력은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경제의 가장 탄탄한 기반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초과학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이지유신 직후부터 서양 과학기술 계몽서의 출판 붐이 일어났다. 그것을 ‘궁리학’이라고 했다. 궁리를 모르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후일 ‘물리학’과 ‘화학’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했고 수천 개의 물리화학 전문용어가 한문으로 번역되었다. 특히 군사기술 측면에서 서구의 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정부는 군용 목적으로 중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에 국가의 전력을 투입해 왔다. 일본인들은 근대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사회사상과 정치사상이 아닌 과학기술을 통해 인식했다. 특히 지배계급인 사무라이 출신이 국가 교육을 받고 기술 관료가 되어 공업화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했다. 이로 인해 군과 관료기구가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제철, 화학 공업과 자동차, 항공기 분야의 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패전 후에도 이러한 전전의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의 원천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기술 능력을 발휘하여 60년대에 세계 최고의 기술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현재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위 “히든 챔피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기술력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미일동맹에서 일본을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게 해준다. 일본의 기술능력이 일본의 국제적인 지위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다.

일본의 19세기 근대적인 경제발전이나 패전 후 급속한 경제회복과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은 이러한 역사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2021년 현재 현재 일본은 인구 1억2630만 명 GDP는 약 4.94조 달러, 1인당 GDP 3.5만 달러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며 4위의 무역대국이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적인 경제적 기반과 현재의 경제력 수준으로 볼 때 일본이 비록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침체기를 거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경제가 곧 몰락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9년 OECD의 《일본경제검토보고서》는 일본이 코로나 사태가 일본의 경제발전을 후퇴시켰지만 정부의 적절한 대응정책으로 최초의 충격으로부터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확대금융정책이 지속되고 재정은 지속가능한 수준이며 장기적인 환경 과제에도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와 생산성 향상을 금후의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4) 대외 의존도

일본의 경제는 19세기 근대화 이후 줄 곳 높은 대외의존도를 유지해 왔다. 거의 모든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지만 무역의존도는 30% 이하로 생각보다는 낮은 편이다. 그것은 일본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으면서도 국내시장이 크다는 의미다. 자본·금융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일본 내에서의 내외국인의 경제활동은 국제적 자유무역 질서에 충실하게 자유로우며 대



외적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있다. 일본사회와 경제의 이러한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적인 상호의존성(international inter-dependency)은 일본의 무역 투자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도와 신용을 높게 해주고 있다. 또한 미일동맹에 의한 안전보장은 일본의 가장 안전하고도 유익한 대외의존성의 핵심이다.

5) 국제적 환경

일본인들은 전쟁이나, 냉전, 평화, 다자협력체제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스스로가 대체로 잘 적응한다고 생각한다. 19세기 말 약육강식 시대에 강대국이 되었고 패전했어도 냉전과 주변 지역의 전쟁 덕분에 경제 부흥에 성공하여 경제대국이 되었고, 평화와 다자협력체제의 국제환경에서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앞세웠다는 도덕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전후 다자간자유무역체제는 패전 일본의 부흥과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해 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냉전은 일본의 정치군사경제적인 전략 가치를 높여주어 일본이 그러한 양호한 국제환경을 일본에게 좀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실제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특수는 일본경제의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1950년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그것을 또 하나의 “가미카제(神風)”이라며 흥분했다. 이어 195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베트남전쟁 특수도 일본 경제의 도약에 큰 도움을 주었다. 현재 일본은 미·중 신냉전과 디지털 4차혁명 시대에 적응하는 과제가 있다.

6) 군사력

미·일동맹은 일본의 안전보장의 핵심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1854년 페리제독이 일본을 개방시킨 이후 일본은 줄곧 미국의 비호를 받아왔다. 매년 봄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의 한 가운데 있는 타이달 베이슨(Tidal Basin)을 둘러싸고 만발하는 수 천 그루의 벚꽃은 그러한 역사적인 유대관계를 상징한다. 그 벚꽃은 1912년 일본이 기증한 것이다. 미국과의 태평양전쟁 직전까지도 일본은 모든 석유 소비의 90%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미국은 일본의 만주와 중국 침략까지는 사실상 눈감아 주었다. 패전국 일본은 냉전 덕분에 미국으로부터 다시 그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당초 미일안보조약은 미국이 일본을 방어해준다는 약속이 아니라 미군의 주둔을 위한 사실상의 주둔군협정이었다. 미국은 공산세력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을 필요로 했고 일본은 주권국가로서 영토를 보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을 필요로 했다. 1960년 기시 정권은 그 조약을 대등하게 상호 방위를 약속하는 안보조약으로 개정했다. 일본이 50년대 한국전쟁 특수와 60년대 베트남전쟁 특수를 누릴 수 있었고,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이름으로 무력으로 장악하려다 실패한 동남아시아를 전쟁 없이 거저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미일동맹 덕분이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미일동맹은 경제적 안전보장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아시아에서, 또한 세계에서 일본이 강대국의 일원으로 행세할 수 있는 뒷배경이 되어주고 있다. 일종의 “호가호위(狐假虎威)”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능력은 일본의 전략적인 가치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히 우주개발, 미사일, 항공기 등 주요 무기체계 분야의 미·일 간 협력에서 일본의 기술력이나 부품이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일동맹은 기술동맹이기도 하다.

일본의 안전보장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패전 이후 미국의 점령당국(GHQ)에 의해서 주어진 소위 “평화헌법”이다. 신헌법의 제9조 1항은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포기”하고, 2항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포기한다”는 의지를 규정하였다. 다만 냉전 초기에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군대를 창설하여 약 30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무력은 오직 방어목적으로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전후 일본 내의 정치 논쟁의 핵심은 “헌법 개정” 또는 “자주 헌법” 제정인데 그 핵심은 헌법 9조의 개정 문제로 집약된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은 헌법 9조의 폐지 또는 개정이나 자주 헌법 제정을 주장하며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지향한다. 반대로 진보 세력은 “평화 헌법”을 수호하고 “전수 방위” 체제를 옹호한다. 그러나 대체적인 흐름은 방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 아베 정권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헌법의 개정을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론의 저항으로 실현하지는 못했다. 다만 소위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여 전수 방위 원칙을 완화하고, ‘유사시 개념’의 범위를 넓혀 군사력의 행사 가능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무력공격사태법>, <국민보호법> 등 유사법제와 <통신방수법(도청법)>, <특정기밀보호법(일명 스파이방지법)> 등 치안입법을 정비했다. 또한 전통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교육법을 개정했다. 현재의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증강의 목표를 “정부 전체의 자원과 능력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위체제의 강화”로 설정하고 단지 방위성의 예산만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성청에 국방 관련 예산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과거의 전쟁시대의 “총력전체제”를 연상하게 한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방위비 예산은 “전쟁 계속 수행 능력 향상”과 “적의 기지 타격(반격) 능력 확보”를 중요 목표로 편성되었다. 일본의 군사화 잠재력은 일본의 예산방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일본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대략 GNP의 3% 내외, 예산의 15-20%를 군사비로 투입했던 역사가 있다. 당시 건함경쟁을 이끌었던 영국은 1905년부터 14년까지 10년 동안 국가예산의 평균 41%(GNP의 평균 2.71%)를 군사비에 투입했다. 2022년도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약 5조3700억엔이다. GDP의 1% 이내라는 전통적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예산에서 방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다. 일본의 방위비는 1)본예산의 약 40%인 인건비와 식비, 2)일반물건비(당해년계약분 지불), 3)세출화경비(이전 계약분 지불경비)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방위비예산에는 본예산의 약 50%에 달하는 “신규후년도부담”이라는 항목의 미래 지출분 예산이 제시되어 있다. “신규후년도부담”은 장비도입을 금년에 계약하고 향후 10년에 걸쳐 지불하는 경비이며 초년도에는 계약금액의 약 10% 정도만 지불한다. 사실상 예산의 다년도집행 방식으로 일종의 월부 지불인 셈이다. 따라서 금년도 “신규후년도부담”액의 10%는 차년도의 3)세출화경비에 포함되게 된다. 2022년도 세출화경비는 방위비예산의 약 35%인 1조7364억엔이 계상되어 있다. 일본정부가 본격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하게 되면 ‘세출화경비 예산’이 우선적으로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출화경비 예산’의 증가 속도가 ‘방위력 확대의지’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일본의 방위비 당겨쓰기는 오래된 전통이다. 1887년부터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다년도 집행이 가능한 임시군사비(전비) 운영제도가 확립되어 전쟁준비기나 전쟁시에는 임시군사비가 일반예산상의 방위비보다 훨씬 많았던 기형적 예산운영 전통이 있다. 2차대전 직전부터 임시군사비가 격증하여 전시에는 GNP의 50%, 패전 직전인 1944년에는 GNP의 98.6%가 임시군사비로 집행되었다. 그 예산은 모두 특별국채로 조달되었다. 1945년 패전 직전 일본은 총 720만의 병력을 동원했다.

19세기 일본의 근대화는 방위산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이지유신 이후 1945년 패전 시까지 부국강병은 국가의 일관된 산업화 목표였다. 모든 과학기술 개발과 산업



개발이 군사력 확충과 연계되어 있었다. 부국강병은 고대 이래 일본의 가장 중요한 지배이데올로기였다. 에도시대의 280여개 번의 영주인 다이묘들은 영지의 안정을 위해 영지 내의 생산조건을 정비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메이지유신으로 탄생한 신정부의 최초의 목표도 부국강병이었다. 부국강병 정책은 필연적으로 군수산업에 중점을 둔다. 산업정책은 시장원리가 아닌 관주도의 ‘국가자본주의’로 출발했다. 군과 산업의 근대화가 동시에 추진된 것이 일본의 자본주의화의 특징이다. 정부는 방위산업에 우선적으로 금융자본이 투자되도록 유도했다. 전기통신이나 철도 등 산업인프라 건설에도 군사적인 이유가 상당히 작용 했다. 일본의 산업계는 군부와 협력하여 발 빠르게 기술의 근대화를 추진했다. 일본의 경제는 자국의 대외침략전쟁이나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과 같은 타국의 전쟁 수요의 덕을 입으면서 성장해왔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중화학공업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호황은 사라지고 1920년대의 전후 공황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1923년 관동대지진, 1927년의 금융공황이 이어진 만성불황을 겪으면서 1930년대부터는 군국주의 파시즘의 토양을 형성하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산업생산 5개년 계획 등 군사적 목적의 경제계획과 경제통제를 위한 법령 제정도 충분히 경험했다. 또한 카르텔을 이용한 경제통제 방식도 경험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였고, 1940년 12월에는 경제신체제확립요강을 제정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여 사실상 계획경제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소위 “총력전체제”를 운영해 본 경험은 앞으로 일본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일본이 경제안보를 인식하고 강화하는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일본인들은 경제력이 국방력의 기본이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운영하는 데에도 군사적 의미나 방위정책과의 연관성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는 편이다. 대부분의 과학기술도 이중용도 목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과 군사력의 연계, 경제와 군사적 안보 개념과 그 인식은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지금도 주요 기간산업의 생산기업들은 모두 군수산업으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이미 50년대부터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방위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불경기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일본의 군사 목적의 수요 창출이 구미가 당기는 해법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인구감소에 따라 더 이상 경제성장이 어렵고 새로운 성장선도사업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군수산업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아베정권이 이러한 경제의 군사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일본의 자위대를 비롯한 모든 군사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철저한 문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7) 인간 안보(human-dimension security)

자유, 민주주의, 고용, 소득, 복지, 인구구조 변화 등 인간안보 지표는 분야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모든 분야에서 일본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 다만 G7이나 OECD 국가 등 선진국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인간안보 지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일본인의 전통적인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심리구조는 일본인들의 행복지수 기준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일본인은 전통적으로 어려움을 인내하고 정부에 순응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에서 그만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버티어내는 힘과 회복력(resiliency)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안정감 있게 보이는 것은 일본의 중요한 경제안보와 전략적 자산이다. 일본이 발행한 국채의 93% 이상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함부로 매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일종의 일본의 저력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일본이 GDP의 250%가 넘는 국가채무를 안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엔화의 교환성과 위험회피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일본인의 ‘순응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8) 대외적 영향력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40%~70%의 비교적 높은 호감도를 유지하고 있다. 근대 유럽인들에게 일본은 새롭게 발견된 ‘문명’이었다. 16세기부터 포르투갈상인에 의해서 일본이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산업화 이전 형태의 무역이 활발했다. 임진왜란으로 끌려간 조선의 도공들에 의해서 발전한 도자기 제조기술로 유럽에 도자기를 수출하여 일본적 색깔과 문양을 일본에 전파시켰다. 19세기 유럽의 인상파 미술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유럽에서는 일본의 문화를 “자포니즘”으로 불렀다. 19세기말 시카고 박람회에서 처음 소개된 일본의 문화는 제피(jappy)라는 일본 인형으로 상징되었다. 일본의 나가사키를 무대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도 일본의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였다. 일본의 근대화는 서구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놓았다.

아시아에 대해서는 서구의 문물을 먼저 ‘수입 가공’해서 전파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현재 한자문화권에서 쓰는 거의 모든 학술용어나 많은 생활용어는 일본인들이 서구의 언어로부터 직접 번역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문화적인 요소가 알게 모르게 심어져 있다. 예를 들면 “공화(共和)제”는 “republic”을 번역한 말이다. “republic”의 원래 의미는 군주로부터 주권을 찾아 민중(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다. 사실 혁명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의 한자 의미는 (왕과 백성이) 서로 화합한다는 의미다. 그것은 천황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일본의 지배계급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역사 분야에서도 일본의 영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구의 역사인식과 서술을 받아들여 “민족의 역사(민족사)”를 기술했고 “동양사”라는 개념으로 일본 중심의 아시아 역사 프레임을 구성했다. 보편적 문화로 존중받아왔던 중국의 역사가 중국 중심의 민족사로 변질된 것도 이러한 일본을 모델로 하고 또 저항한 결과물이다. 한국의 역사학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도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식 역사인식 프레임은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1930년대 이후 일본의 침략적 제국주의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지만 일본은 패전 후 금방 그러한 이미지를 탈색했다. 1964년 선진국클럽인 OECD에 가입하고 도쿄올림픽을 개최하여 일본이 다시 세계의 ‘강국’으로 컴백했음을 알렸다. 대외원조(ODA)도 적극 확대해 나갔다. 76년에는 핵심 선진국 협의체인 G7의 원년 멤버로 참여했다. 80년대에는 G2라고 불리는 경제대국 지위를 배경으로 강한 문화적 전파 능력을 보였다. 9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9) 외교

일본은 앞에서 언급한 1)-8)까지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일본은 서구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국가다. G7 멤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으로서 대접받는다.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크다. UN이나 UNESCO, OECD 등 거의 모든 국제기구에 미국에 버금가는 분담금을 내고 있다. 냉전시기도 미국과 동맹관계라는 틀 속에서도 소련과 수교하



고 일정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등 동서진영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외교를 전개했다. 냉전 종식 이후에는 일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활동의 영역을 안보분야로까지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노력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외교적 역량을 바탕으로 일본은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국제적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3. 약점

일본의 약점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밴드왜건의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외부 여건이 좋을 때는 그것을 잘 이용해서 상태가 좋아지지만 그 여건이 일본과 아귀가 잘 맞지 않거나 나빠질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나빠지거나 사고를 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인식도 과거의 성공사례에 도취되어 그 조건을 전제로 한 단기적인 승부나 미봉책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외교나 경제정책에서 그런 현상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적, 사회심리적 특성은 일본사회와 대외환경 조건에 따라서는 정반대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가 어렵고 침체되고 불안정한 대외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시대에는 그러한 특성들은 분열이나 이기주의, 비관주의, 무책임성, 배타적 배외주의, 편향적 애국심, 반인도주의, 침략과 전쟁 유혹, 무질서, 반민주주의 등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안전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앞세우는 세력이 득세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의 가능성은 일본의 국력과 그에 따른 대외적 전파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상당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여파를 줄 수도 있다.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3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경제의 장기적 침체와 쇠락으로 인해 일본정치의 우경화가 심화되면서 이미 그러한 조짐이 고개를 들고 있다. “험한” 정치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갈 데까지 가보자”는 자포자기적 “옥쇄(玉碎)” 심리가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일본이 G2라는 경제대국이 되어 최전성기를 누리던 8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출간되어 고전(古典)이 된 『실패의 본질』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체계를 비판하면서 일본의 패전 요인을 7가지로 요약했다. 첫 번째는 사고가 경직되어 있어 창의력이 없고 따라서 창조적 파괴도 일어날 수 없는 사고체계의 문제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형식의 전승(傳承)에만 집착하는 것이다. 현재도 도장 찍는 절차만 통과하면 만사 오케이라는 인식이 지배한다. 네 번째는 현장의 현실과 지혜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일본군의 ‘참모’는 실제 전투경험이 없는 탁상전략가들이 많았다. 아마도 2019년 7월 1일의 한국에 대한 ‘전략물품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이런 류에 속하는 결정이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모든 조직과 단위에서 ‘리더십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집단의 “분위기(구키空氣)”에 구속되는 맨탈리티 문제이다. 분위기에 그저 따라가는 행태가 무책임의 구조를 형성한다. 일본에서 회의는 어떤 문제를 발굴하는 토의나 무엇을 결정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디선가 정해진 것을 전달하면서 책임을 분담하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사회의 현실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해결방안을 알고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많은 장애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 장애물은 일본사회와 일본인들의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모든 약점은 일본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한다.

1) 자연조건



일본인들은 일본을 “가지지 못한 나라”로 표현한다. 산업에 필요한 자원은 빈약하고 미국처럼 땅도 넓지 않다는 의미이다. 일본이 안전한 강대국이 되려면 그 자원과 땅을 “가진 나라”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그 만주의 석탄과 철광, 동남아시아의 석유와 고무를 얻기 위해서 침략에 나서야 했다. 지금도 일본인들의 “없는 나라” 심리는 여전하다. 또한 일본은 지진과 태풍 등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잦다. 역사 속에서는 생활이 어렵고 재난이 겹치는 시대에는 일본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집단적인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 19세기 메이지유신 직전에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퍼진 “에에자나िका(좋지 않은가)”라는 춤판 소동, 수백 종의 토속신앙이 번지는 종교적 열풍,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등이 그런 사례다. 2011년 동북대지진과 원전폭발 사고 이후 배타적 우경화 경향 심화되고 “험한”이 유행하는 것도 재난 관련성이 있다.

2) 정치사회적 조건

일본의 정치체제는 입헌민주주의체제다. 1945년 패전 후 미국의 점령당국에 의해서 수립되었다. 일본의 정치체제에는 서구의 개념과는 다른 전근대적인 요소가 많다. 고대 신화로부터 하나의 왕조로 계승되어 온 천황을 최고의 정치 수반으로 하고 천 년 가까이 사무라이(무사)계급이 정치를 독점해 왔다. 19세기 말 메이지유신을 거치면서 형태적으로는 입헌민주주의체제로 변신했으나 본질적으로는 과거의 천황과 귀족 중심의 과두적 권력체제가 그 외형을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다이묘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천황과 다이묘들이 민주주의의 형식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진짜로 작동한 시기는 패전 직후인 1945년부터 1947년까지의 짧은 기간에 불과했다.

패전 일본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최대한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공을 세운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점령당국(GHQ)으로부터 “평화헌법” 초안을 건네받으며 “일본을 민주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오? 난 아니라고 보는데...”라고 빈정거렸다고 한다. 일본의 전통적인 지배 철학으로는 민중은 “바람에 쓸려 눕는 풀”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민은 언제나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였다. 패전 후 보수세력이, 그리고 1955년 이후 지금까지 자민당의 1당 지배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민중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패전 후 승전국인 미국의 ‘강요’에 따라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본의 구지배계층 권력이 미국과 타협하여 수립한 것이다. 그런 연유로 일본의 민주주의는 하의상달형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상의하달식 ‘지도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명령받은 민주주의’이고 ‘배급받은 자유’라고 했다. 그 민주주의의 특징은 일본적인 것이고 일본적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약간 괴리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 일본적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천황은 상징천황으로서 영국의 왕과 같은 지위의 군주이지만 고대신화의 화신으로서 종교적 정념을 상징한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른 군주다. 천황의 신화적, 고대 역사적, 종교적 존재성은 일본의 역사, 정치, 문학 등 모든 사회생활을 사실상 통제한다. 역사학자는 일본인의 기원을 고고학적 근거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공화제’라는 말은 금기어가 되었다. 상징천황제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개인의 자립이나 자유로운 연대를 저해한다.

두 번째는 “평화헌법”은 일본인 스스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점령군에 의해서 ‘명령받은 민주주의’의 징표이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자유 역시 점령군으로부터 ‘배급받았다’고 자



조 한다. 그러나 그 선물은 48년 점령정책의 ‘역코스’가 시작되면서 일찌감치 ‘반납’되었다. 1955년에 보수적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결성된 자민당 정권의 “55년 체제”는 정권교체 가능성을 가진 경쟁적인 정당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유’의 정도가 낮은 정치 시스템이라고 평가된다. 그래서 전후민주주의를 ‘도금(鍍金)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물론 2009년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그 민주당이라는 것은 자민당에서 이탈한 파벌이 창당한 보수정당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늬만 정권교체였다. 정권은 불과 3년 뒤인 2012년 말 중의원선거를 통해서 역시 자민당에게 ‘반납’되었다. 일본의 정권교체는 역시 일본답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세 번째는 일본의 정치체제와 사회 저변에 남아 있는 봉건적 잔재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기득권적 계급구조를 지탱해온 지배계층의 세습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치가문의 세습이다. 국회의원의 약 70%가 직간접적으로 세습의원이라고 한다. 정치가가 되려면 ‘지방(地盤)’, ‘간방(看板)’, ‘가방’ 등 “3방”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 유행한다. 그것은 사회적인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의미의 봉건적 잔재는 여전히 관공민비 전통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 억압체제의 잔재다. 일본의 문화적 패턴의 줄기는 권위주의와 탄압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일본국민이 양순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좋게 표현한 말이다. 서양인들은 “일본인을 통제하기 쉽다”고 평한다. “바람에 쓸리는 풀처럼 복종하는” 일본인의 사회적인 관습은 일본정치인의 세습을 사실상 보장해준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정치체제 문제에 관한 논쟁은 모두 헌법 개정 문제로 집중된다. 헌법 개정론에 관한 논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점령군이 만들어준 헌법이 아니라 일본인 스스로 만든 헌법을 가지겠다는 소원이다. 그래서 일본의 우익과 친미세력은 헌법을 비판하며 개정을 주장하고, 미일동맹과 대미예속을 비판하는 진보세력은 평화헌법을 그대로 지킬 것이라는 ‘기이한’ 또는 ‘특이한(unique or exceptional)’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의 측면은 헌법 개정 논쟁이 자유와 인권, 평등, 국제평화와 협력 등 보편적인 가치 존중보다는 무력의 보유와 행사를 부정하는 헌법 제9조의 폐기 또는 개정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의 아이러니는 제정 당시부터 시작되었다. 48년 이후 냉전이 확산되고 한국전쟁까지 발발하자 일본의 재무장이 급선무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헌법은 일본의 무장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강요했던 “평화헌법”을 무장이 가능하도록 당장 개정하라고 종용하는 모순을 연출했다. 오늘날에도 헌법 개정 논란에 미국의 영향력이 보이지 않게 작용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일본이 미일동맹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견제한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항상 불분명하다. 천황제와 기존의 계급적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일본의 집권 보수세력에 게나, 좀 더 대중의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진보혁신세력에 게나, 미일동맹은 똑같은 지배이데올로기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사실상 일본의 모든 정치행위에 미국이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위로 전후 일본의 정치인들은 “대미 종속으로 대미 자립을 이룬다”는 대단히 교묘한 전략을 유지해왔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본의 정치세력이 친미 정책을 유지하는 한 미·일관계는 안전하고 따라서 일본의 국내정치도 안정된다. 그 반대 의미는 국내정치세력이 너무 과도하게 미국으로부터의 이탈을 시도하면 국내정치세력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밸런스가 일본의 정치와 미·일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일본 내의 우경화 추세나 정치적 논쟁은 모두 미·일동맹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정치문제가 사실상 미국과의 외교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인들의 선택이 더 큰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일본의 군사안보 상황은 물론 경제안보에도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정치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처음부터 상징천황제라는 절대 불변의 장벽에 막혀 있고, 또한 미일관계라는 울타리에 갇히게 된다. 그 안에서 몸부림치듯 울부짖는 세력이 우익이라고 할 수 있다. 우익은 1990년대 말까지의 자민당의 틀 내에서 머물며 대세에 순응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시작된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는 일본 국민에게 큰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이는 ‘강한 일본, 대국으로 재도약하자’고 외치는 우익세력이 활동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우익세력의 목적은 ‘개헌’뿐 아니라 전후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 우경화는 정치엘리트가 주도하는 것이지 일반여론이 주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여론이 정치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본사회의 특징적 현상이다. 우경화 정권은 국가의 권위나 권한을 확대한다. 역사수정주의를 내세우며 해외에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지향했다. 이웃 국가들에 대한 적대감도 고조시켰다. 2003년 ‘신우파’를 자처한 고이즈미 정권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신자유주의 개혁’과 ‘국가주의’로 내세웠다. 그것은 강자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 수단을 활용했다. 고이즈미가 추진한 구조개혁은 “종신고용”이라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단 번에 없애버렸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 성장동력 약화, 산업공동화는 심화되었다. 일본의 대미의존은 더욱 심해졌다. 2012년 제2차 아베정권은 이러한 모순과 시행착오의 혼란 속에서 출범했다. 아베 정권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반발로 인해서 당장의 불황을 극복하는 ‘경기 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후 체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정책을 추진했다. 아베정권은 메이지유신과 ‘일본의 근대’를 찬미하는 복고주의와 국가주의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아베의 목표는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통해 일본의 자립을 되찾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익세력이 어떤 몸부림을 치든 일본의 정치가 미국의 품에서 벗어나기는 여전히 어려운 구조다.

일본의 우익은 민족주의, 전통주의(천황숭배), 역사수정주의, 배외주의,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뭉쳐 있다. 우익 세력은 언제나 만세일계의 천황의 신성함과 불가침성을 내세운다. 이들에게 역사반성은 천황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익세력과 신토, 그리고 특정 유사종교 세력은 언제나 연계되어 왔다. 일본사회가 불안한 상태가 될 때마다 유사종교는 급증하고 그에 비례해서 우익세력도 증식되었다. “생장의 집”(生長の家)이나 통일교회와의 관계가 그런 것이다. 우익은 일종의 NGO인 수백 개의 우익단체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들은 배타적인 애국심 조장과 대국민 협박에 나서는 일선 조직이다. 그리고 우익의 활동에는 언제나 암살 등 사적인 테러가 뒷받침 역할을 해왔다. 일본의 정치사 자체가 암살의 역사라고도 한다. 우익은 또한 군사력 증강을 주장한다. 그러나 ‘자주방위의 꿈’이 강할수록 미일동맹의 현실에 의해 좌절되는 구도가 더 분명해진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아베의 안보정책도 대미 군사적 종속만 심화되는 역설로 끝났다. 이러한 한계와 좌절감은 우익을 필연적으로 역사수정주의로 이끈다. 어차피 천황제 지배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는 역사관은 침략의 역사를 부인한다. 이렇게 일본사회의 배타적인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체제안정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정책이나 정치의 질에 대한 지식인들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오늘날에도 일본의 언론과 지식계층은 오래된 어용적 전통을 그대로 안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일본의



‘위기’를 타개해 나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언제나 제약되게 된다. 아베 전 수상이 백주에 암살당한 것은 ‘어떤’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

3) 경제

일본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일본의 국채규모와 소위 “잃어버린 30년”에 관한 이야기이다. 일본의 국채규모는 2022년에 약 1500조원으로 일본의 GDP의 2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부채가 많아지면 정부재정이 민간경제에 대해서 별론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2022년 일본정부의 세출예산은 약 104조엔인데 조세수입은 50조엔 이므로 새로 국채를 발행해서 차입한 빚이 54조엔이라는 의미다. 세출에서 국채상환 지출이 24조원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 그러니 실제 정부가 쓸 수 있는 것은 80조원이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실제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26조엔에 불과 하게 된다. 매년 정부지출을 한 푼도 안 쓰면서(정부의 기능을 포기하고)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현재의 빚만 ‘무이자’로 갚는다면 30년이 걸린다.

“잃어버린 30년”에 관해서는 패전 이후 77년만의 또 하나의 패전이라고도 한다. 일본의 최전 성기는 1989년 말이었다. 일본의 경제력은 GDP와 경제성장율, 무역, 금융 등 모든 지표가 침체 내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는 1억2808만 명을 피크로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산연령 인구는 이미 1996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기술진보가 멈추어 노동생산성 상승도 멈췄다. 여기에 정책도 부실했다. 2020년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세계 23위로 추락했다. 한국은 27위다. 평균임금은 2014년 이후 한국보다 낮아졌다. 국제환경도 그리 유리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안보 정세의 악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쇠퇴 등의 현상은 일본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범주를 넘고 있다. 90년대 이후 “잃어버린 30년”의 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정치·사회·경제적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었다. 일본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쇠퇴했다.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GDP는 51.36배 성장했다. 인도의 GDP는 33.33배 커졌고 한국의 GDP는 8.53배 늘어났다. 그 사이 일본의 GDP는 1.12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 엔화 표시 GDP는 정체상태이지만 달러기반 GDP는 급속히 감소했다. 일본제품의 점유율 저하, 고용의 비정규화, 연금 및 건강보험의 부실화 전망, ‘좀비기업’ 문제, 가혹한 노동조건, 소득격차와 빈곤의 확대,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쇠퇴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지표가 나빠졌다.

특히 2012년 출범한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에 의해 실제적, 심리적으로 정착된 엔의 저평가(엔저) 상태는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 엔은 더 고평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엔저 상태다. “빅맥지수” 기준으로는 1달러 당 69엔 정도가 정상적이라고 한다. 2022년 10월 현재 엔은 140엔대까지 하락했다. 과거 일본은 수출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이 더 이상 생산기지가 아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거의 해외로 이전했고, 그에 따라 역수입이 증가했다. 일본은 무역적자국이 되었다. 엔저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순기능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노령층이 생활수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자산 가격이 하락했다. 또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30년간의 디플레 심리가 인플레이션 공포로 바뀌고 있다. 1995부터 2021까지 25년간 일본의 물가는 4%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물가는 85% 상승했다. 낮은 인플레이와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 화폐의 불활성잔고가 격증하는데(화폐유통 속도 저하)



시중에 풀린 돈이 인플레이 우려와 겹치면 폭발적인 인플레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심리적 기대의 변화가 다급하게 정반대 현상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문제)

일본의 경제문제를 논할 때마다 항상 정치문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본의 정치 문제는 경제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정치권력의 교체가 없고 세습하는 정치인들에 이해서 움직이는 정치는 정책이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결정될 수 있고 또 정책의 문제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제공하지도 못한다. 그것은 일본 민주주의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정권교체가 없는 민주주의는 정책 대처 능력이 그만큼 무뎌지기 마련이다. 앞 선 정권을 부정할 수 없다면 정책의 오류나 실패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에 계속 덧칠을 하다 보면 현실과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진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고이즈미 정권의 소위 “구조 개혁”의 부작용과 그 이후 2012년까지 아베-후쿠다-아소-하토야마-칸-노다로 이어지는 1년짜리 단명 내각이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은 부실한 경제정책을 부추겼다. 2012년 이후 9년간 계속된 2차 아베 정권은 고금리시대의 도래로 인해 일본의 경제를 퇴로가 없는 곳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1년9월 29일 출범한 기시다 정권도 아베의 경제정책을 당장 부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새로운 성장전략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분배를 중시하는 “신 자본주의”라는 정책을 내걸었다. 고이즈미-(민주당정권)-아베-스가로 이어진 세와(清和)정책연구회(아베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부터 복지중심 정책을 좀 더 강조하는 고치카이(靑지회宏池會·기시다파)로 권력이 이동했다. 여기에 헤세이(平成)연구회(모테기파)가 가세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의 대수술이 아니면 정치가 일본경제를 당장 다시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대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정치가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일본 국민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저항하고 있다. 총선거 투표율은 20여 년 전 70%대에서 하락하여 지금은 50%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비율은 2006년 10% 였으나 2019년에는 27%까지 증가했다. 어떤 지역은 48%가 되는 곳도 있다.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치세력과 관료가 결탁한 ‘이상한’ 경제정책은 계속되고 그 비용은 국민들이 지불하게 될 것이다.

(정책의 문제)

일본 경제의 쇠퇴는 1990년대 이후 시행된 일본의 경제정책이 가져온 일종의 결말이다. 변동환율제의 시행과 금융자유화는 재정정책보다 금융정책을 경기 대책의 기본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대책이 반복되었다. 재정확대 정책은 여전히 공공사업과 토건사업에 집중되었다. 버블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신화”와 “금융 지원이 무제한이라는 믿음”으로 커진다고 했다.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일본의 버블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1990년 사이에 형성되었다. 플라자합에 따른 엔고는 금리저하를 초래하고 그것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본격적인 버블은 1988년 이후에 발생했는데 1987년에 금융긴축을 시행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비극’은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는 금융대책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계속해서 악셀레이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가속하는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산가격이 폭등하고 있을 때에도 금융완화정책을 계속하고(악셀레이터를 밟고), 버블이 붕괴되고 있는 데 급속하게 금리를 인상하여 긴축금융으로 급전환했던 것이다.(브레이크를 밟았다)



1987년-1990년 간 일본의 화폐공급(머니서플라이)이 급증했다. 약 2002조 엔의 과잉유동성이 존재했다. 은행의 신용대출은 주로 부동산, 건설, 리스, 기타 금융 등 4개 분야에 집중되었다. 그와는 반대로 제조업은 용자를 상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태에서 1996년 하시모토 내각은 미국의 권고와 압력에 따라 “free, fair, global”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일본의 금융시장을 개방시키고, 일본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 철폐, 엔저 유도를 통해 외국자본이 일본의 자산 매입을 용이하게 했다. 그것을 “일본판 금융빅뱅 정책”이라고 했다. 그런데 1997년부터 1998년에 일본도 금융위기를 겪었다. 1997년11월 금융시장의 1차 위기가 표면화되고 거대 금융기관이 줄지어 파산 위기 직면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형성된 자산 버블의 붕괴가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이미 예견된 것인지는 모르다. 그런 상황에서 1997년 하시모토 정권은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경기는 악화되고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다시 금융 불안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었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로 인해 1년 만에 퇴진했다. 결국 상장사의 30%가 외국인 소유가 되었다. 유수 우량기업의 외국인지분은 50% 이상이 되었다. 일본 경제 정체가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 오류는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불량채권을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사실상 탕감해줌으로써 좀비기업으로 연명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정부는 민간은행에게 기업의 채무를 연장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또한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원활화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소위 제안자의 이름을 딴 “카메이 법”)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었다. 그것은 불량채권 정리를 미루어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막고 당장의 경기부양을 위한 미봉책이었다. 첨단산업 경쟁에서 패배한 일본기업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살려줌으로써 오히려 첨단산업의 발전을 저해했고 산업구조의 전환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민간 기업은 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거의 모든 기업주들은 사실상 정상 이윤보다 더 큰 이익이 될 정도로 공적 지원을 받았다. 서구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 일본에서는 시스템의 핵심 원리이다. 2011년 전후 일본의 기업파산율은 미국과 영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그래서 기업의 파산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것이 더 위험한 지표라는 역설이 생겼다. 그 결과 1000조 엔 규모의 민간불량채권이 국가의 채무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부실을 은폐하는 부정회계 문제도 심각하다.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모두가 과거의 고도성장이라는 성공 체험을 공유하며 추억에 잠기는 것 같다. 재무성의 관료주의와 조직이기주의 문제도 빈번하게 지적된다. 과거 대장성의 3원칙은 미봉책, 은폐, 차후로 미루기라는 비판도 있었다. 재무성은 1996년 버블 붕괴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소비세 증세를 강행했다. 그 결과 1997년에서 1998년에 걸쳐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재무성과 일본은행의 정책실패가 일본경제 정체가 더욱 더 심각해지는 요인이 되었다.

2001년 고이즈미 내각이 과감하게 추진한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구조개혁”은 결국 일본경제를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었다. 레이건 정부와는 정 반대로 증세를 통해서 재정수입을 확대하면서 재정을 긴축하고 왜곡된 금융행정을 취함으로써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우정민영화로 대표되는 개혁은 일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생활 기반을 파괴했다. 전후 일관되어 온 노동자보호적인 노동법과 노동기본권(종신고용 등)을 파괴하는 결과가 되었다. 일본이 자랑하던 종신고용제도도 사라졌다.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은 결과적으로 반도체, 슈퍼컴퓨터, 액정패널, 태양광패널 등 첨단 일본제품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다. 2012년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일본은행의 양적금융 완화는 ‘인플레이 타겟론’이라는 예측의 조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플레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생기면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미 버블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계심을 가진다. 일본은행이 양적으로 금융을 완화해도 은행 밖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는다. 은행신용이 확대되지 않는 것이다. 풀린 돈은 일본은행에 있는 민간은행의 당좌계좌에서 동면하고 있다. 그러니 시중에 돈을 풀다고 해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 결국 대기업의 내부 유보와 배당만을 확대시키고 무역적자 체질은 더욱 굳어졌다. 아베노믹스는 공적 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하여 주가만 높였다. 연금기금을 리스크가 높은 주식에 투입하는 것이다. 주가가 내려가면 일본은행이 ETF(지수연동형 상장 투자신탁 수익권)를 구입하여 주가 전반의 인상을 꺾고, 또한 GPIF(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법인)와 공제연금의 자금을 계속해서 투입한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주식시장은 금융완화 확대책과 일본은행과 연금기금의 개입에 의한 국가신용에 의존하는 관제 주식시장이 되었다. 연금재정은 부실해졌다.

일본은행은 최근 물가가 상승하고 미국 금리가 상승해도 계속해서 금융완화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정책을 포기하면 국채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국채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매년 국채이자 지불에만 정부예산의 7% 이상이 소요된다. 그래서 미국이 빠른 속도로(자이언트스텝) 금리를 인상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엔저가 가속되어도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아베노믹스의 “이(異)차원적 금융완화” 정책은 성공한 순간 파산하게 되는 커다란 자기모순을 안고 있었다. 금리가 상승하면 바로 재정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었다. 즉 출구가 없는 정책인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정책은 언제나 ‘아무 생각 없이 최대한 버티는 정책’, ‘그저 갈 데까지 가보는 것’이라는 자조적인 비판을 받는다. 일본은 사실상 일본은행의 용자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2022년6월말 현재 일본은행의 국채보유액은 517조 2399억엔으로, 총 국채발행잔고 1025조 6638억엔의 50.4%에 이른다. 국채는 일본은행 총자산의 71.5%나 된다. 일본은행은 정부의 빚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내국인이 일본국채의 93%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도 사실상 “검은 머리 외국인(해외거주 일본인)”이므로 거의 100% 국내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지불불능이 된다 해도 일본 내에서의 문제라는 것이다. 참고로 2020년 기준으로 미국국채는 국내인 67%, 외국인이 33%를 보유하고 있다.(약 7조달러) 영국국채는 2016년 기준으로 국내인 72.4% 외국인이 27.6% 보유하고 있다.

2001년 고이즈미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일본의 국내산업 기반과 전통적인 원세트 산업구조가 소멸되었다. 오랫동안 일본은 해외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그것을 완제품으로 가공해서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모델이었다. 수출대기업은 생산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거의 모두 일본 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일본국내의 공급망은 대기업-중소기업-중간상인-농촌형 가내기업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농촌지역에는 말단 부품 공정을 담당하는 가족단위의 소규모 가내공장이 번창했다. 통계상으로 농촌의 가계소득 중 농업보다 공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한편 공업지대와 대도시지역에서는 종신고용제도가 당연한 노동 형태로 유지되었다. 그것은 백성이 다이묘의 영지에 평생 종속되어 있었던 일본의 전통적 경제·사회 제도의 산물이기도 했다. 일본산업의 생산 공정상 최종 뱅더인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계열적으로 묶여 있는 하청기업들로부터 원가를 쥐어짜고 회사에 충실한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다. 이른바 “가족 자본주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일본의 안전한 “공급망 체인”은 세계로 확대되고 국내의 공급망 체인은 붕괴되었다. 대기업들은 전체 주식의 40% 이상을 외국자본이 소유하는 ‘외자계 기업’이 되었다. 그 경우 당기 순이익을 높이고 내부유보와 주식 배당을 확장하는 일에 주력하게 된다. 대기업의 수익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지만 임금은 늘어나지 않고 30년 전 수준에 정체된 상태에 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대기업의 소득증가가 아래로 전파되는 이른바 trickle-down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기러기 편대형(flying geese model) 시스템은 더 이상 가동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본사회를 지탱해 오던 모든 전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일본 이미 평등사회가 아니라 소득 격차가 큰 사회로 변질되었다. “잃어버린 30년” 간 산업구조는 물론 사회구조도 변질되고 과학기술은 쇠퇴했다. 이에 따라 과거 방식의 경제정책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대외의존과 미국의 정책변화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

1987년 10월 일본은행이 공정한인율(기준금리)을 막 인상하려고 할 때 뉴욕 증시 대폭락이 일어났다. 10월 19일 월요일 발생한 소위 “검은 월요일(Black Monday)” 사태였다. 그것은 1929년 10월24일 “검은 목요일”의 하락율 12.8%보다 더 큰 22.6%의 하락율을 기록했다. 그로 인해 일본은 버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적시에 필요했던 금리 인상을 뒤로 미루어야 했다. 그 후 1989년1월 미국의 부시(아버지)정권 출범과 동시에 미국은 달러강세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에 따라 1989년5월 일본은행도 공정한인율을 인상할 수 있었다. 1년6개월 늦은 타이밍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 버블은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 엔고-금리저하-자산가격 상승이라는 사이클이 일거에 엔저-금리상승-자산가격 하락 구도로 전환된 것이다. 그 이후 버블 붕괴로 시작되는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일본의 경제를 외부환경에 더 민감하게 노출시켰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이 일본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커졌다. 가장 큰 영향은 금융 분야에서 발생한다. 채권시장과는 반대로 주식시장의 외국인 의존도가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의 전체 주식 중 약 32%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율은 고이즈미 정권기에 비약적으로 높아져 20%대까지 상승했다.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로 30%대를 돌파했다. 주식매매에서 외국인 비율은 60% 이상이다. 일본의 버블이 붕괴된 직접적인 계기는 2004년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의 여신규제 강화” 조치였다. 그것이 일본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부족 상황을 초래했고 은행의 부실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헤지펀드가 일본 은행들의 파산을 기획했다는 설도 유포되었다. 2008년과 2009에 걸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리만브러더스 파산)의 여파도 컸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일본의 경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무역마찰이 그 주요 영향 루트였다면 지금은 단연 금융정책을 통해서 충격이 전달된다. 특히 일본국민의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므로 금리와 환율 변동 등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가 일본 국민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다. 게다가 일본의 패전 이후 지금까지 일본정치에 미국의 지배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자합의는 물론,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이나 아베노믹스의 본질은 미국의 의향을 따르는 것이다. 그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다. 1993년 당시 일본의 미야자와 정권과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합의한 <미일 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공동성명>에 따라 일본은 1994년부터 매년 미국이 제출하는 ‘연차개혁요망서’에 대한



일본의 조치를 통보해야 했다. 고이즈미 정권의 우정민영화도 미국의 요구에 따른 개혁 조치였다. 2004년4월부터 2005년5월까지 우정민영화 담당자들이 총 17회에 걸쳐 미국의 관계자들과 협의했다고 한다. 일본의 우체국은 약 300조엔의 자금(예금), 대규모 부동산, 전국의 숙박시설 등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의 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일본의 경제가 유동적이 되었다.

현재의 국제금융시스템 내에서는 미국의 국채는 사실상 구입하는 것만 가능하다. 일본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거나 일본의 은행이나 기업이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주로 미국의 국채인 재무성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2022년1월 현재 일본의 미국국채보유액은 1조 1250억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정치현실 상 일본은 그 국채를 대규모 매각해서 엔을 방어할 수 없다. 미국의 국채를 처분하는 것은 너무 큰 정치적 부담을 가져온다. 과거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미국국채를 매각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적이 있다”라고 발언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하시모토는 그 후 실각했다. 최근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함으로써 아베노믹스는 출구를 상실하게 되었다. 미중 마찰과 대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의 확대, 이로 인한 신냉전 추세, 자자간자유무역체제의 쇠퇴와 국제적 공급망 재편 등 최근 전개되는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일본의 경제는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무책임과 부패고리로 연결된 사회관계망)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감세를 통해 세수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는 경제가 어떤 이론이나 데이터, 그리고 규칙에 따라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면 경제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서 세금을 더 낼 수 있게 되는 경제이론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런 이론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은 오직 증세를 통해서만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일본의 사회체계가 미국과 달리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 다른 점을 흔히 “특별하다(unique)”, “예외적이다(exceptional)”라고 표현한다. 그 특별함과 예외적인 양상은 일본 사회의 무책임하고 부패한 사회관계망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거시적 정책 진단이 옳다 해도 그 진단에 맞는 현실 정책 이행이 어려운 이유는 인맥과 부패로 얽힌 사회관계망의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1930년대의 무책임의 체제가 사회적 황폐와 전쟁을 초래했다는 경제사적 경험도 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불량채권 문제를 얼버무리기 위해 거액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은행경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원전 사고에 대해서도 도쿄전력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고이즈미 정권에서는 내부자거래 등 금융 부정이 횡행했다. 2003년5월 리소나은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4) 헌법 개정과 방위력 증강 문제

2012년 출범한 2차 아베 정권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당면한 과제로 인식했다.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이 일본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라는 우익세력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해서 소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들고 군사력을 확대·강화하는 길에는 네 개의 장애물이 놓여 있다. 그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러한 우익세력의 꿈은 다른 형태와 다른 방향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첫 번째 장애물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가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그 안이 국민투표로 승인되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승인된다. 2022년 7월 참의원 선구 후 현재의 의석 분포로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지지세력 4당’의 합계가 개헌통과선인 3분의2를 초과하고 있어(각각 +36, +11) 수치상으로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데 문제는 없다. 그러나 1947년 제정된 소위 “평화헌법”은 이제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그만큼 일본정치에서 헌법 개정은 난제 중의 난제다. 모든 정치논쟁이 헌법 개정 여부에 집중되어 왔고 모든 정치세력이나 이데올로기는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갈라진다. 아베 정권도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했지만 9년이라는 일본정치사상 최장기 집권을 하면서도 실현시키지 못했다. 단지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는 편법으로 부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여론의 동향과 사회분위기이다. 최근 몇 년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방위력 강화와 헌법 개정 필요성에 찬성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해오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2022년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논란 등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022년도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는 대체로 헌법에 개정 찬성하는 쪽이 37%-71%, 반대 21%-38% 정도로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헌법 제9조 “평화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을 때는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9조를 더 구분해서 물어보았을 때 1항의 “전쟁포기 조항”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가 80%로 압도적이고, 2항 “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찬성이 50% 반대 47%로 찬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이 34%에 불과하고 오히려 현행 유지가 좋다는 쪽이 46%로 우세했다. 방위비 증액 재원은 국제발행을 통한 조달이 좋다는 의견이 43%, 사회보장비등 예산 삭감을 통한 조달은 30%, 증세를 통한 조달은 20%였다. 결국 일본 사람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쪽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전쟁포기 조항이나 군대보유 조항의 개정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해지고,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조달은 자기주머니의 부담은 피하고 미래 세대나 사회보장 혜택자의 부담으로 미루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다수결로는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일본사회의 특성상 현재 수준의 개헌 지지율로는 당장 개헌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보다 더 절대적인 비율의 찬성이나 어떤 계기로 형성될 수 있는 대세분위기(구키·空氣)가 필요할 것이다. 개헌 세력의 중요한 한 축인 공동여당인 공명당도 “단순히 무드(분위기)만 가지고는 개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월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서 헌법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진짜 실행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일본인들에게는 과거 일본군대에 관한 이미지는 여전히 좋지 않고 과거 군국주의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히 원하지 않고 있다. 전후 장기간에 걸친 평화체제 속에서 국민의 일반적인 관심이나 지지도는 상당히 낮아져 있다. 아베 정권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면서 자위대 군인들의 퇴직이 늘어났다는 통계도 그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세 번째는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일이다. 일본의 정부채무가 이미 GDP의 2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간단치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2022년도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약 5조3700억엔 GDP의 1% 정도다. 22년도 예산에서 방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다. 만약 일본이 NATO의 목표와 같이 GDP의 2%를 방위비



로 쓰려고 한다면 일거에 5조엔 이상을 더 조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방위비 예산 증원을 어떻게 조달할 지에 관해서는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법인세나 소비세 등 증세를 통해 조달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어떤 경우든 방위비 예산 증액은 일본 경제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본 국민들이 과거 1930-40년대처럼 극한적인 내핍생활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인 여건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물론 모든 것이 당장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재와 같은 방위비 당겨쓰기 예산 방식으로 “신규후년도부담”이라는 항목의 예산이 급증하고 그것은 그 후 10년간에 걸쳐서 집행될 것이다. 어찌 되든 매년 예산에서 그 ‘월부금 납입’을 부담하는 예산 부분, 즉 “세출화 경비”는 급증할 것이다. 일본이 과거 군국시대처럼 본예산보다 많고 어떤 때는 연간 GNP에 버금갈 정도의 임시군사비(전비)를 운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매년도의 방위비 항목 증액을 위해서 정치적인 노쟁이나 대결은 되풀이될 것이다. 그것은 헌법 개정 문제보다 더 시끄럽고 마찰적인 정치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고 해도 오늘날의 국제금융체제에서 일본의 국채가 무한정 안정적으로 팔릴 수도 없을 것이다. 방위비 조달 문제는 헌법 개정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다.

네 번째는 미국의 용인 문제다. 미국은 일본의 헌법 개정을 공식적으로는 지지해 오면서도 그것이 민주주의나 미·일동맹의 궤도를 이탈할 정도의 이탈이 되면 안 된다는 한계선을 암묵적으로 그어왔다. 20세기 이래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무리 우호적이고 돈독한 시대라 해도 그 한계를 의미한 말이 있었다. “필리핀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미국의 해군력은 일본을 위협할 것이고, 반면에 그러한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일본의 해군력은 하와이를 포함한 태평양 전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이 말이 미·중 관계에 더 어울리는 표현일 것이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일본이 미국의 이익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국내정치에서는 헌법 개정 문제로, 미·일관계에서는 미·일안보조약으로 일종의 통제(control)를 한다. 미·일동맹은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전략에 철저하게 종속되어야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동맹은 전통적 군사동맹과는 다르다. 그것은 공통의 외교안보전략과 자위대의 미군 통합(사실상의 보조병), 친미적인 일본국민, 일본의 국내정치에 대한 미국의 통제 능력이라는 3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일본은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의 틀 속에서 머물러야 한다. 독자적인 외교안보정책은 미·일동맹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일본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친미적이다. 미국은 일본 국민의 은인이기 때문이다. 1854년 미국의 페리 제독은 군함을 끌고 와서 일본 국민을 막부의 억압체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근대화라는 선물을 주었다. 그래서 페리 제독은 지금도 ‘시모다(下田)의 신’으로 추앙받는다. 1945년 패전 후에는 일본 국민을 ‘신성한’ 천황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선물을 주었다. 미국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정치인은 정치생명이 끝난다. 더구나 미·일동맹과 관련되는 일이 거의 상시적으로 일본의 국내 정치의 담론과 쟁점이 된다. 그것은 일본의 “평화헌법”이 미국에 의해서 강제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일본은 사실상 미·일동맹에 정치적으로 속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미·일동맹이 일본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감시하고 방지하는 기능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장차 일본의 재군비나 헌법의 전쟁금지조항인 9조 개정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라는 주전자 속의 물이 뜨거워지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끓어오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2013년4월 시점에서 미국이 아베 정권의 개헌 움직임을 견제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내세워 방위력을 증강하고 방위비 예산을 늘이는 것이 더 편리하다. 방위성은 2023년도 예산 증액 요구의 근거로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약속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지지했다”는 2022년 5월23일 미일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을 제시하고 있다.

5) 인간 안보(human-dimension security)

G7이나 OECD 국가 등 선진국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본의 전성기였던 1980년대에도 비교적 빈약한 수준이었다.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이용율과 포착율(적용율)은 선진국의 최하 수준이었다. 2010년도에 일본은 각각 1.6%, 15.3%-18%였으나, 독일은 각각 9.7%, 64.6%, 프랑스는 5.7%, 91.6%, 영국은 9.27%, 47%-90%였다. 특히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적다. G7중 교육비의 GDP대비 비율이 최하위이다. 2018년 영국 6.1%, 미국 6.0%, 캐나다 5.9%, 프랑스 5.2%인데 반해서 일본은 4.0%에 불과했다. 2000년 이후에는 일본이 세계 유수의 소득격차 국가로 전락했다. 1990년 이후 소극 격차는 계속 커졌다. 지니계수는 1990년 0.25에서 계속 상승해서 9년 0.47에서 2017년 0.5594로 상승했다. 2021년도 행복지수도 G7국가들 중 최하위였다.

물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일본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데 따른 원인이 가장 크다. 그러나 일본만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선 원래의 1억 평등사회라는 인식은 고이즈미 시대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사라졌다. 종신고용제도는 무너지고 소위 파견노동제가 도입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전체 노동자의 40% 이상으로 커졌다. 그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이다. 15-24세 사이의 젊은이 중 4할이 비정규노동자이며 국민연금의 미납 및 체납율도 30%-40%에 이른다. 거기에 소위 “잃어버린 30년” 동안 고용기회를 얻지 못하고 단속적인 취업(아르바이트)으로 생활을 유지해 온 “잊혀진 세대”가 있다. 그들은 50대로 들어서고 있다. 실업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3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기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기업이 불황기를 노동임금의 삭감으로 지탱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세계 최악의 임금감소국이 되었다. 기업은 불황기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주가는 상승했다. 기업 내부 유보는 증가했다. 그러나 실질 임금과 가계소비는 정체상태다. 대기업과 자산을 보유한 투자가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의 5년간 기업의 이익은 2.3배 격증했다. 반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실질임금은 6% 하락했다. 기업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금총액을 억제해서 분배율을 저하시켰다. 기업 수익의 트리클다운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실질임금의 저하는 가계 소비의 감소를 초래했다.

그에 더해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도 점점 부실해졌다.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중 최하위 수준인 것은 변함이 없다. 빈곤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재정악화로 인해 보장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아베노믹스는 사회보장비의 자연증가분을 억제하는 삭감책으로 필요한 재정지출을 마련하고자 했다. 일본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자문제가 아니라 재정지출 분배의 왜곡 문제다. 왜곡된 조세제도도 소득 격차를 확대한다. 간접세인 소비세는 증세할수록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소비세 증액분이 고소득자의 소득세 감소분으로 사용되었다. 직접세인 소득세제도도 그렇다. 일본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세부담율이 사실상 저하한다. 부유계층에 유리한 조세구조다. 연수입이 1억엔 이상이 되면 최고 28.7%에서 오히려



실질적인 세율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결국 일본은 조세부담은 높고 사회보장수준은 낮은 최악의 조합이 되었다. 그것은 국가가 세수를 다이묘들의 사치와 전쟁으로 낭비했던 역사적 배경과도 연결된다. 결국 정치의 문제인 것이다. 빈곤화가 진행되면 국내시장은 더욱 축소되고 악순환이 계속된다.

6) 대외적 영향력과 외교능력

일본은 경제력에 비해서는 대외적 영향력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그리 크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말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 시기가 있었지만 침략적 제국주의에 대한 역사적인 부정적 이미지가 근저에 정착되어 있다. 80년대 급속한 경제대국화를 배경으로 강한 문화적 전파력을 보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립되어 갈라파고스화 되었다”는 의미로 “잘라파고스(Japan+Galapagos)”라는 말이 더 유행하고 있다. 1980년대 전성기 시대와 비교해서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은 쇠퇴했다. 일본의 하드파워와 함께 소프트파워도 약해진 것이다.

일본의 외교도 그 경제력에 비해서는 그리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아왔다. UN이나 UNESCO, OECD, WTO 등 다자간 국제기구에 분담금도 월등히 많이 내고 국제적인 ODA제공 규모도 한 때는 세계 최대 규모였지만 일본의 국제적인 발언권은 그리 크지 못했다. 한 마디로 일본이 G2국가였던 80년대에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까지는 잦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외교관료들의 중심적인 역할이 존중되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선진국형 외교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관료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또한 관료집단으로부터 정치인을 차출하기도 했다. 1980년대까지 일본 자민당의 파벌을 크게 둘로 나눌 때는 흔히 관료출신의 관료파와 당료파로 분류했다. 요시다, 기시, 이케다, 사토, 다나카, 미야자와 등 일본의 전성기 시대의 총리는 대부분 관료 출신이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권 이래로 일본 정부는 정치인들이 장악했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공”이 “늘공”을 장악한 것이다. 세상 일이 저절로 잘 돌아갈 때는 “어공”도 관료 흉내를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어공”은 세상을 더 어지럽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외교가 그렇다.(물론 한국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일본의 외교든 국제금융 능력이든 국제질서의 전환기나 위기에 대한 주도능력은 커녕 사후적 대처 능력마저 저하되어 있다. 일본외교의 가장 큰 족쇄는 ‘일본의 외교정책은 미일동맹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틀 안에서 그 외교 전략과 외교 행위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4. 기회

경제안보 개념에서 일본의 기회는 역시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기술에 있다고 하겠다. 그 기술이 어떻게 산업화되고 상업화될 지는 일본사회의 남아있는 역량에 달렸다. 일본 사회가 당장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서구 수준의 열린사회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30년”의 결과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는 절박한 분위기는 일본인의 인식과 사회를 일신시킬 수도 있다. 특히 일본사회의 특성상 “창조적인 파괴”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생산기반이 사라지고 전통적인 산업체계가 무너진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경제·



산업 체제를 구축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2019년 OECD의 《일본경제검토보고서》도 일본의 최대 과제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충분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G7 국가 정부의 평균 디지털화율이 30%인데 비해서 일본은 7-8%에 불과하다. 2차 대전 중 도쿄가 폭격으로 초토화된 덕분에 좁은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었던 도쿄의 시가지를 넓고 직선화된 현대식 시가지로 재건할 수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기회는 일본인 스스로 그 조건을 만들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 조건은 결국 일본인들의 정치의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문제다.

5. 위협

“잃어버린 30년”의 결과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는 절박한 분위기는 일본인의 인식과 사회를 거꾸로 과거 지향적 복고주의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인국의 감소와 경제적 활력의 상실은 그러한 심리적인 대리만족감을 유인할 가능성을 크게 한다.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인들의 그러한 절망적인 심리와 사회분위기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우익세력은 일본사회의 자포자기적 분위기가 배양되기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 이미 아베 정권의 9년간 우익세력이 그 힘과 영향력을 확대했다. 현재 일본의 사회적 조건으로 볼 때 그것은 일본의 미래에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의 미래를 조망하는 일본의 태도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6 주요 오피니언 리더

일본에서는 어떤 분야든 오피니언을 리드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분위기(구키공기)에 따라 형성되는 총의(컨센서스)에 따른다.

정계인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1957년생. 히로시마, 중의원10선

자민당 총재. 방위대신, 외무대신 역임. 기시다파벌 수장(의원수 46 중34, 참12)

조부, 부 모두 전 중의원의원인 세습의원

마쓰노 히로카즈(松野 博一) 관방장관

내각총리대신임시대리예정자 1순위

1962년생, 중의원8선(구 아베파)

아베 정권에서 납치문제담당 대신, 문부과학대신 등 역임.

무라이 히데키(村井英樹) 기시다 수상 보좌관(경제담당)

1980년생, 사이타마, 중의원4선, 재무성관료 출신

기시다 총리의 브레인, 정책통이며 고이즈미 지로와 더불어 차기 총리 후보자로 평가된다.

아소 타로(麻生太郎) 부총리

1940년생. 후쿠오카, 중의원 14선,



자민당 부총재. 이미 간사장 총리 및 총재, 총무대신, 외무대신, 재무대신 역임.
아소파벌 수장(의원수 55 중42, 참13)
조부는 요시다 전 총리. 세습의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대신
내각총리대신임시대리예정자 3순위
1961년생, 야마구치, 참의원5선, 중의원 초선
하버드대학 박사
방위대신, 농림수산대신, 문부과학대신 역임.
고조부, 조부, 부가 전 중의원의원인 세습의원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 康稔) 경제산업대신
1962년생, 효고, 중의원7선.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
장인이 전 중의원 의원(자치대신)

스즈키 준이치(鈴木俊一) 재무대신
내각총리대신임시대리예정자 4순위
1953년생, 이와테, 중의원10선
자민당 총무회장, 환경대신 역임.
부는 스즈키 젠코 전 총리, 아소타로 전 총리가 매형. 세습의원

하마다 야스카즈(浜田 靖一) 방위대신
1955년생, 치바, 중의원10선
부는 전 중의원의원. 세습의원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
1955년생, 이바라키, 중의원 10선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경제산업대신, 직전 외무대신 역임.
모테기파벌 수장(구 다케시타파, 의원수 52, 중32, 참20)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1963년생, 도쿄, 중의원6선
관방부대신, 문부과학대신 역임. 아베 전 총리의 측근. 우익 성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중의원의원
1957년생, 돗토리, 중의원12선
자민당 간사장(2회), 정무조사회장, 농림수산대신, 방위대신 역임.
2012년 아베와의 총재 경쟁에서 1차 투표에서는 높은 대중지지도로 승리했으나 과반수에 못
미쳐 당규에 따라 당소속 의원 투표인 2차 투표에서 패배했다. 여전히 잠룡으로 평가된다.



고노 타로(河野太郎) 디지털 대신
 내각총리대신임시대리예정자 4순위
 1963년생, 가나가와, 중의원9선
 외무대신, 방위대신 역임
 조부는 전 부총리, 부는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의장(관방장관). 세습의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여) 경제안전보장 담당 대신
 내각총리대신임시대리예정자 2순위
 1961년생, 나라, 중의원9선
 2차 아베 정권과 현 기시다 정권에서 자민당 최초의 여성 정무조사회장(2회), 총무대신, 특명
 대신 역임
 일본의 침략과 전쟁책임을 부정한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역사수정주의자. 징용자와 군대위안부의 강제연행 사실도 부정한다. 강한 우익 성향.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여) 중의원의원
 1959년생, 후쿠이, 중의원6선
 2차 아베 내각에서 방위대신 역임(아베의 측근)
 도쿄전범재판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부정하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일본의 전쟁책임을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자. 군대위안부의 강제연행 사실도 부정한다. 강한 우익 성향.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1939년생
 와카야마, 중의원13선
 운수대신, 홋카이도개발청장관, 경제산업대신, 자민당 총무회장, 간사장 역임.
 자민당 최고령 의원. 니카이파벌(의원수 47, 중37, 참10) 수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중의원의원
 1944년생, 이바라기, 중의원13선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방위청장관, 재무대신 역임
 일한의원연맹회장

고이즈미 준지로(小泉進次郎) 총무회장대리
 1981년생, 가나가와, 중의원5선
 자민당 청년국장, 환경대신, 기후변동담당 특명대신 역임
 차세대의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2021년 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현 총리에게
 반대하여 고노 타로를 지지하고, 이시바와도 연대했으나 패했다. 기시다의 정적이 되었다.
 증조부로부터 4대째 세습하는 세습의원. 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아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대표
 1952년생, 이바라기, 중의원2선, 참의원4선

이즈미 겐타이(泉健太) 입헌민주당 대표



1974년생, 교토, 중의원6선

고이케 유리코(小池 百合子)(여) 도쿄도지사(무소속)

1952년생, 참의원1선(일본신당), 중의원8선(자민당). 도지사당선 후 <희망의 당> 창당
카이로대학 졸업, 아랍어 통역, 텔레비도쿄 아나운서 출신.

고이즈미 정권에서 환경대신, 1차 아베 정권에서 총리보좌관(안보담당), 방위대신 역임

경제계 인사

도쿠라 마사카즈(十倉 雅和)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장

1950년생, 스미토모화학 회장

미무라 아키오(三村 明夫) 도쿄상공회의소 회두

1940년생, 일본제철 명예회장

사쿠라다 겐고(櫻田 謙悟)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1956년생, SOMPO홀딩스(보험업) 그룹 회장(CEO)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1937년생, 미쓰비시상사 상담역

사와다 준(澤田純) 일·미경제협의회 회장

1955년생,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NTT) 회장

손 마사요시(孫 正義)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겸 사장

1957년생. 2021년 3월 현재 보유자산 약 450억 달러

재일한국인. 일본 국적

학계

오마에 겐이치(大前 研一)

1943년생, 경영컨설턴트, 경제평론가

일본의 미래학자. 장기간에 걸쳐 미래경제에 관한 다수의 전문서, 대중서 저술

가라타니 고진(柄谷 行人)

1941년생, 효고, 철학자

《제국의 구조》 등 다수 저서. 다수 한국어 번역본 출간

노구치 유키오(野口 悠紀雄)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

1040년생, 경제학자, 대장성 관료 출신

최근 한국경제가 일본경제를 추월할 것이라고 경고한 내용이 한구언론에 보도되었다.

다카이치 요이치(高橋洋一)



1955년생, 경제학자, 경제평론가
 대장성관료 출신. 현실경제에 관한 대중서 다수 저술
 아베노믹스 옹호. 기시다 경제정책 비판

우에쿠사 가즈히데(植草一秀)
 1960년생, 경제평론가
 도쿄대경제학부 졸업, 노무라종합연구소, 와세다대 교수 역임

(한국 전문 학자)
 와다 하루키(花田春樹) 도쿄대학 명예교수
 1938년생, 역사학자. 진보적 시각
 한국, 북한 문제, 재일한국인,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역사갈등 문제에 관한 역구 및 저술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1945년생, 국제정치학자
 한반도문제 및 한일관계 관련 연구자. 원로 학자. 다수의 제자.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학 교수
 1973년생, 한국정치, 한반도문제, 한일관계 분야 연구

기미야 다다시(木宮 正史) 도쿄대학 교수
 1960년생, 고려대학에서 박사학위. 한반도 문제 연구.
 한국의 진보적 시각에 동조하는 경향

아사노 도요미(浅野 豊美) 와세다대학 교수
 1964년생, 국제정치학, 동아시아지역 외교사. 전후 일본과 주변국가들 간의 관계 중점 연구

고하리 스스무(小針 進)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1963년생, 서강대 대학원 수학. 한국과 북한, 북동아시아지역 국제정치 연구
 시즈오카현립대학 부속 현대한국·조선연구센터장

언론계

후나바시 요이치(船橋 洋一)
 1944년생, 일선 기자 출신 언론인, 평론가. 전 아사히신문 주필
 친미파 경제기자로 경제안보 분야에 관한 심층 취재를 바탕으로 다수의 베스트셀러 저서를 출간했다.

다치바나 다카시(立花 隆)
 1940년생, 언론인, 논픽션작가, 평론가. 정치, 경제, 철학, 환경, 생명, 의료, 우주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다수의 베스트셀러 저자.



오카모토 나오토시(岡田 直敏) 일본경제신문사 대표이사 회장
1953년생, 일선기자 출신 언론인

나카무라 시로(中村史郎) 아사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1963년생, 일선기자 출신 언론인

와타나베 쓰네히코(渡辺恒雄) 요미우리신문사 대표이사 주필
1926년생, 일선신문기자, 정치부장, 논설위원장 역임
직접적인 언설로 보수우파 세력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일본 정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마에다 데루노부(前田晃伸) NHK(일본방송협회) 회장
1945년생, 후지은행 출신, 전 미즈호파이낸셜그룹 회장

요시노 도모코(芳野友子)(여)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회장
1966년생, 노동운동가, 최초의 여성 렌고회장

외교관료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국가안전보장국장겸 내각특별고문(2022.7 취임)
1958년생, 전 외무성 외무사무차관(2018-2021.6) 年12月19日[1] -)
중국과장, 국제법국장, 종합외교정책국장, 외무심의관
총리실 국가안전보장국장에 다시 외교관 출신자가 임명되었다는 의의.

야치 쇼타로(谷内 正太郎) 야치사무소 대표, 전 외교관
1944년생, 2차 아베 정권시 총리 직속의 국가안전보장국을 신설하고 최대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역임. 전 외무사무차관(2005), 내각특별고문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문제합의를 이끌어낸 막후 주역
일본의 강대국외교론자.
2022년1월 기시다 총리가 면담, 의견 청취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세계정보조사회 회장(전 국가안전보장국장)
1956년생, 제2차 아베 정권의 내각정보관, 2대 정보조사국장 역임
안보국장 재임중 경제안보 분야 중시
경찰 출신

다나카 히토시(田中 均) 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 전 외교관
1947년생, 전 샌프란시스코총영사, 전 외무성 경제국장, 아시아대양주국장, 외무심의관(차관보). 아시아대양주국장 재임시 2002년 고이즈미총리의 방북 및 북·일정상회담 실무준비 담당.
한국 담당인 북동아과 과장 역임.

스시야마 신스케(杉山 晋輔) 전 주미 일본대사, 전 외교관
1953년생,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외무심의관, 외무사무차관을 거쳐 주미대사 역임.



와세다대학 출신이 외교관 최고 지위까지 오른 최초의 사례(대부분은 동경대학 출신)
한일관계의 갈등 시기에 국장, 외무심의관 역임

II. 참고: 일본 개관

1. 개관

일본의 정식 국호는 일본국(日本國, JAPAN)이며 ‘텐노’(천황)를 국가의 상징으로 하는 입헌군주제로서 내각책임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38만 km² 넓이(한반도의 약 1.7배)의 영토는 대체로 온대와 냉대, 아열대 기후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인구는 2022년 현재 약 1억2475만명이다. 전국의 행정조직은 수도인 도쿄(東京·Tokyo)를 포함하여 1都(도쿄도), 1道(홋카이도), 2府(오사카부·교토부), 43縣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교는 토착종교인 신도(神道 : Shintoism)가 중심이며 불교(Buddhism)신앙이 혼재되어 있다. 1945년 패전 후 1952년 4월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주권을 회복했다.

소위 “평화헌법”으로 알려진 일본의 헌법은 패전 후 미국이 만든 초안을 받아들여 1947년 5월 3일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으로 공포되었다.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 제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으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교전권’ 즉 전쟁의 포기를 선언하고, 제9조 2항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불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헌법 개정이나 재무장 논의는 헌법 9조의 개정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 개정 원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중의원 의원 100명 이상, 참의원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가결되기 위해서는 중·참의원 모두 총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되면 천황 공포한다.

현 ‘텐노’(천황)는 나루히토(德仁) 텐노이며 2019년5월1일 즉위했다. 연호는 레이와(令和)이다. 전임 아키히토(明仁) 텐노의 건강상 생전 양위에 따른 즉위이며 생전 양위는 일본역사상 최초라고 한다. 아키히토(明仁) 텐노는 상황(上皇)이 되었다. 천황은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이며(헌법 제1조)이만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헌법에 정해진 일정한 국사(國事) 행위 이외 국정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행사하지도 않는다.(동 제4조) 천황 및 황족은 선거권·피선거권도 없다. 천황의 국사 행위는 총리대신 임명, 국무대신 등 고위 관리의 임면, 대사의 신임장 수여, 헌법 개정, 법률, 정령(政令) 및 조약의 공포, 국회의 소집과 중의원 해산,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사면, 특사, 감형, 형집행 면제 및 복권의 인증, 조약의 비준서 등 외교 문서의 인증과 외국 대사의 접수 등이다. 국사(國事)에 관한 천황의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각에 귀속된다.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의원 의원중에서 선출된다. 현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이며 2021년 9월30일 취임했다. 일본의 의회는 중의원(465명)과 참의원(248명)의 양원제이다.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이 여당 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주요 정당은 자유민주당(중의원262,



참의원119, 총381석), 입헌민주당(97, 39, 총136석), 일본유신회(41, 21, 총62석), 공명당(32, 27, 총59석), 일본공산당(10, 11, 총21석), 국민민주당(10, 10, 총20석) 등이 있다.(2022년10월 현재) 1980년대 이후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1982-87 나카소네 총리의 전후정치의 총결산

1989 자민당 참의원 선거 패배, 과반수 실패

1993-94 호소카와 정권

1989-94 오자와 이치로 '정치 개혁과 정계 재편'

1994-96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上富市)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자민당.사회당.신당사키가케 연립내각 정권 성립.

1996-98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6대 개혁'과 '백래쉬'

1998 자민당 참의원 선거 패배, 과반수 실패

2001-06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구조 개혁'

2007 아베 신조 총리(1차) '전후 체제 탈피'

2007년 참의원선거 자민당 패배, 아베 총리직 사임

2009년 중의원선거 민주당 승리, 민주당 정권 탄생

2012- 아베 신조 총리 재등판(2차 아베정권)

2020년 9월 아베 사임

2020년 9월-2021년 9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

2021년 9월 기시다 노부오 총리 취임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며 서구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국민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편적인 가치로 존중하며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UN, IMF, WTO, OECD등 거의 모든 국제기구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76년 창설된 주요 선진국협의체인 G7과 주요국협의체인 G20의 멤버이다. 1980년대에는 미국 다음으로 GDP가 큰 G2 국가로서 전성기를 누렸으나 1990년대 이후 자산버블의 붕괴와 수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가 침체하여 “잃어버린 30년”이 계속되고 있다.

2. 외교 국방 현황

일본은 2013년12월 최초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수립했다.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이념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존중, 법의 지배 등 보편적 지류를 지향하며 그러한 기본적 인식 속에서 일본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번영을 도모하며 세계평화와 안전,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일본은 헌법에 따라 “평화 국가”로서 존재하며, 전수방위와 비핵3원칙(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만들지도 않으며, 핵무기의 일본 내 반입을 금지하는 것)을 준수한다. 외교와 안보는 미일동맹을 축으로 하여 수행한다. 특히 해양국가인 일본은 해양의 안전과 자유 통항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과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21세기 이후 국제정세와 과학기술에 발전에 따라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소위 “영역횡단” 대응 전략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방위정책은 “전수방위”,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는다”, “비핵3 원칙”, “문민통제 원칙”을 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아래 방위 정책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



지하기 위한 역지력을 강화하는 것,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외교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국제환경이 21세기에 들어와 크게 변화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안보환경이 가장 큰 대외 안보환경의 변화로 본다. 그러나 여전히 개방된 세계는 유지되고 있고 미국이 여전히 세계질서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외교안보 정책의 전제로 하고 있다. 일본이 경계하는 것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우려, 국제테러, 해양과 우주, 사이버공간 등 국제공공재(global common) 리스크가 커지고 이에 따라 인간안보와 경제가 위협 받을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아·태지역에서는 중국의 방위력 증강과 강경한 대외정책에 따른 미국과의 대립, 동북아시아, 즉 한국과 일본, 중국의 군비확장 경쟁과 북한의 핵위협을 잠재적 안보위협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세에 대응해서 일본은 외교력의 강화, 종합적 방위체제의 구축, 영토 방위능력 향상, 해양 안보, 사이버안보, 테러대책, 정보기능, 방위장비와 기술협력(제공), 우주, 기술력 강화 등의 분야를 중점 대응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외교안보 협력의 핵심은 미·일동맹이다. 1960년1월 1960년 1월 조인된 《미일 신안보조약》은 일본의 내란에 대한 미군의 활동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유사시 상호 방어를 명문화 했다. 또한 주일미군의 배치와 장비의 이동에 관하여 양국 정부의 ‘사전 협의제도’를 설치하여 주권국으로서의 일본의 체면을 세웠다. 그 이후 미일 양국은 안보조약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동맹의 적용범위와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사실상의 개정을 해오고 있다. 1995년 2월 마련된 미 국방성의 〈동아시아전략보고서〉에 따라 1995년 11월 일본의 〈신 방위대강〉이 마련되었다. 이후 1996년 4월 〈미·일 안보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동맹〉을 발표하고 동맹의 지리적 대상을 확대했다. 그 선언에 따라 1997년 9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을 만들고 일본은 그에 맞추어 1999년 5월 〈주변사태법〉을 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전제로 자위대와 미군을 사실상의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2000년 10월 〈미국과 일본-성숙한 파트너를 향해(일명 아미티지 보고서)〉 발표했다. 〈아미티지보고서〉는 미영의 특별한 관계를 모델로 제시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약하는 일본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안보전략에 적극 동참하면서 미국, 호주 인도와 함께 하는 4개국 안보협력(Quad)에 참가하고 있다.

일본은 아태지역에서 한국, 호주, 인도, ASEAN제국 등과의 안보협력을 중시하며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오고 있다. 러시아와는 사할린 가스 개발 참여 등 에너지협력에 중점을 두면 북방 4개 도서 반환 교섭을 계속해 왔으나 2022년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름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현재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는 거의 동결되어 있다. 글로벌 외교도 중시하여 UN내에서의 일본의 지위 향상과 역할 증대에 노력해 오고 있다. UN의 집단안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법의 지배를 준수하고 군축과 핵비확산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공헌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원조(ODA) 확대에도 앞장 서오고 있다.

일본 방위성의 2023년도 방위비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8%가 증가한 5조5947억엔이다. 그러나 그중 ‘10년 월부 성격’의 당겨쓰기 예산인 “신규후년도부담” 예산은 19% 증가로 훨씬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국방예산의 증가 속도가 장차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방위성은 방위비 증액의 근거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위협을 내세우고 있다. 중점 예산 배분 분야는 장거리 타격능력을 의미하는 “stand-off 방위능력” 강화, 무인 무기 방어 능력과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영역횡단 작전 능력”, 지휘통제와 정보능력, 기동 전개 능력, 전력의 지속력과 강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2022년 현재 일본 자위대의 병력 규모는 총 24만 7천명이다. 그중 육상 자위대는 15만8400 명, 해상자위대는 4만5300 명, 항공 자위대는 4만7000 명 수준이다.

3. 경제 현황

일본의 인구는 18세기 중엽 약 3,000만 명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 급증해 1945년 패전시에는 7,200만 명, 1960년대 말에 1억 명을 넘어섰다. 2021년 현재 일본은 인구 1억2630만 명 GDP는 약 4.94조 달러, 1인당 GDP 3.5만 달러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며 4위의 무역대국이다.

일본의 경제는 1945년 패전 후 거의 제로 상태에서 부흥하고 발전했다. 1946년 일본의 GNP는 전전 1930-34년의 18% 정도 수준이었고 47년도에도 40%에 불과했다. 1945년부터 48년 말까지 대장성과 일본 은행은 인크가 마르도록 지폐를 찍어냈고 그 결과 물가는 매년 몇 배씩 올랐다. 패전 이후 6개월간 암시장 가격은 같은 상품의 공시 가격의 38배에 달했다. 1946년에는 50가지 생필품의 경우 암시장 가격은 공시 가격의 14배, 1947년에는 9배, 1948년에는 5배로 뛰었다. 일본은 농업국가가 되어 야할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1948년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냉전의 확실해지자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은 일본을 수출공업국으로 회복시키고 재군비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것을 소위 “역코스”라고 했다. 점령정책의 “역코스”를 시작하면서 미국은 일본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어야 했다. 마셜플랜의 실무자로서 조지 캐넌은 스페인이 지중해에 대해 요충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소련에 대한 방파제 국가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이 정치, 경제 양 부문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일본의 배상규모를 축소하고 대규모 원조를 제공했다. 미국이 파괴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미국의 일이 된 것이다.

그 이후 일본의 경제는 다시 국제적 긴장과 전쟁 수요를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어갔다. 1950년 한국전쟁은 일본의 경제문제와 안보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었다. 그때 일본은 극도의 불황시기였다. 요시다 수상은 자유당의 비밀 의원 총회에서 “이것은 하늘이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한국전쟁을 ‘가미카제(神風)’라고 불렀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4개월만에 일본의 공업생산은 완전 회복되어 전전 최고 시기인 1936년의 106%에 달했다. 1950년-1952년 사이에 미군의 군수물자 조달액이 일본의 수출의 70%를 차지하게 되었다. 일본의 한국전쟁특수 수입은 1950년 148백만 달러(외화수입중 비율 14.8%), 51년 591백만 달러(26.4%), 52년 824백만 달러(36.8%), 53년 809백만 달러(38.1%)에 달했다.

한국전쟁은 또한 동남아시아라는 새로운 수출시장을 일본에게 열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군산물자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원조제품 조달이 일본에 집중되었다. 미국의 냉전전략은 아시아국가들과 동맹을 통해 공산주의에 대한 군사적 방역



망(cordon)을 설치하는 것과 일본에게 동아시아시장을 주는 것이 핵심이 되었다. 그것은 미국은 원조자금이나 용자, 또는 투자 자금을 대고 일본은 그 자금으로 완제품을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고 동남아시아로부터 식량과 원료를 수입하는 일종의 삼각협력 방식이었다. 일본의 1956년도 경제백서는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1955년부터 일본은 매년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계속했다. 이러한 고도 성장세는 오일 쇼크가 발생한 1973년까지 계속되었다. 일본의 국제적 위치도 크게 변했다. 1968년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일본은 1952년 8월 세계은행에 가입했다. 현재 출자액은 약 200억 달러로서 미국에 이은 제2위의 출자국이 되었다. 1955년 GATT에 가입했고, 1964년 선진국들의 경제협약체인 OECD에 가입했다. 환율은 일본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1달러당 360엔으로 높게 고정되었다.

일본경제의 최고점은 1989년 말이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0년부터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시작해서 그것이 금융 위기로 이어져 경제의 침체 내지는 쇠락이 시작되었다. 경제성장은 정체되어 성장률은 제로에 가까운 상태가 되고 물가는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이 계속되었다. 1990년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소위 “잃어버린 시간”은 처음에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가 그것이 20년이 되고 30년으로 늘어나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상 미국과의 환율 협조였다. 일본은 미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흑자를 계속했기 때문에 1980년대에는 미국과의 무역마찰과 그로 인한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압력에 시달렸다. 그래서 1976년 국제적인 변동환율제도가 정착한 이후인 1980년대부터 엔의 적정 환율을 방어하고 또한 일본의 은행 등 민간투자기관들이 환차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머니게임”에 적극 참여하면서 미국 뉴욕 월가의 금융업자들에게 대해 매년 거의 200억 달러 정도를 잃고 있었다. 매년 미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흑자는 600억 달러에 달했다. 1985년 무역역조의 한 방편으로 구상된 미·일·서독 3개국의 재무장관이 합의한 소위 <프라자합의>는 결국 일본의 경제 몰락의 주범이 되었다. 그것은 당시 미국의 레이건정부의 베이커 재무장관이 11월의 중간선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경상수지적자 확대를 억제하려고 구상한 것이었다. 달러의 가치를 엔화와 마르크화 대비 10-12% 하락하도록(즉 엔화 환율을 1달러 240엔에서 214-218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3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일본과 서독은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확대와 저금리의 금융완화 정책을 해야 했다. 일본의 다케시타 노보루 대장상은 일본의 경제력을 과신한 나머지 엔화 환율이 달러당 200엔으로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뒤 엔화환율은 155엔으로, 3년 후에는 70엔대까지 하락했다.

<프라자합의> 이후 일본은 미국의 년 18% 금리보다 낮은 6%의 저금리를 유지했다. 저리 대출에 더해서 일본의 은행들은 부동산의 가치를 훨씬 초과 하는 담보대출을 해주었다. 사적 인맥과 부패가 작용한 결과다. 대출을 받은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사서 그것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다. 사실상 LTV(Loan To Value Ratio)가 수백% 이상 되었다. 은행에 몇 겹으로 저당 잡힌 부동산은 작은 지분으로 쪼개서 팔았다. 과대평가된 담보자산가치의 위험성은 그렇게 은폐되었다. 기업들은 생산보다는 대출금으로 부동산과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소위 “재(財)테크”로 더 큰 돈을 벌었다. 도요타자동차는 수익의 40% 이상을 재테크로 벌었다. 일본의 은행들은 거대한 ‘허구의 자산’을 기반으로 “초대형 은행”이 되었다. 그런데 <프라자합의>로 엔화 환율이 급락하자 외화자산인 미국채와 해외부동산의 엔화표시 가격이 급락하여 은행과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모두가 부동산을 매각했고, 담보로 연결된 부동산 가격은 60%-90%까지 연쇄 폭락했다. 은행들은 도산했고 ‘잃어버린 1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



본의 부동산버블과 경제의 장기 침체는 <프라자합의>라는 “경제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무능한 국내경제정책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2012년 이후 아베 정권은 미국과 같은 형태의 “양적 완화”(일본에서는 소위 “異次元적 금융완화”)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해서 엔화의 통화발행고가 급증했다. 말은 금융완화지만 실제로는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재정확대 정책이었다. 국채는 발행 즉시 일본은행이 거의 전량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총액의 50%이상을 보유하여 국채가 일본은행의 자산의 80%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은행은 미국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가 없다. 현재까지도 마이너스 혹은 제로 금리(공정할인율)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국채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일본은행의 자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정부의 국채 금리 부담도 늘어나고 금후 발행할 국채도 헐값에 팔아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와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4. 일본인과 일본사회의 독특한 특성(이하 이현주 저 《일본발 험한바이러스》의 52쪽-99쪽 내용의 요약임)

최근 일본사회가 보편적 성격을 잃고 고립되어 “갈라파고스화해 간다”라는 의미의 조언인 잘라파고스(Jalapagos=Japan+Galápagos)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일본의 오래된 역사문화적인 전통과 관습, 그에 따른 개인적 심리와 사회적 관계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고대 이후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엄격한 계급질서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계급은 여전히 세습성이 강하고(의원의 60% 이상이 세습) 사회적인 엄격한 규율과 감시, 처벌과 사적 테러(암살)의 공포, 그리고 그 공포에 순응하는 심리구조와 스트레스가 사회심리적인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다.

서구와 일본의 학자들의 관찰을 종합하면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집단주의이고, 그에 따라 순응적인 운명론이 심리적 저변을 형성한다고 한다. 주술적 의식도 지적된다. 정치와 종교는 항상 연계되어 있다. 극우세력과 <생장의 집>이라는 종교단체와의 제휴, 최근의 정치인과 통일교회의 유착 논란 등이 그런 사례다. 귀납적 사고 경향은 전략과 전술, 전체와 부분을 혼동하게 만든다. 서구와 같은 죄의식보다는 수치의식 심리를 지배한다. 그것은 집단주의와 순응심리와 연관된다. ‘수치의식’은 책임의식이 없다는 의미이고, 책임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면 ‘죄의식’을 느끼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기주의와 무책임성 패전 직후 일본 지배계층이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보수적 현상유지는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거나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러한 심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가 아니라 물리적인 힘이 보다 확실하고 객관적인 행동 규준이 된다. 사회적 규율도 그에 따라 현성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군중심리와 그에 따른 집단히스테리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과 법치의 질, 그리고 언론과 학문은 물리적인 힘을 가진 지배세력을 위한 어용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성향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일본인은 “다테마에와 혼네”와 같은 자연스러운 거짓말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로 용인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선택적 기준의 거짓말도 있다. 연역법과 귀납법을 편의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내로남불)”이라고 한다. 또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했는데 왜 나만 나무라느냐?” 비교하는 거짓말, 즉 물귀신작전도 횡행한다. 통계나 수치 등 정보를 은폐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취사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인의 가장 대표적인 심리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중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저항의 표시이자 자기 보호 수단이다.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들은 척,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무는 것이 살아남는 지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 묘사한 “비합리적인 합리화” 이야기 같은 모순적 합리화도 때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습성이 일본경제가, 혹은 전체 일본의 사회가 “독특하다(unique)”, “유별나다(exceptional)”, “애매하다(ambiguous)”하게 만들고 그것이 일본경제의 파행의 진폭을 을 크게 만든다.

5. 한·일관계 현황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국교가 수립된 이후 서구 진영의 일원으로 돈독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교류가 이어져왔다. 1970년대까지 한일 간 걸끄러운 현안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처우문제, 특히 지문날인 문제가 외교적 현안이 되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역사왜곡문제가 외교 전면에 표출되면서 최근에 와서는 일본 군위안부문제와 징용자 피해배상 문제가 양국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이하 《일본발 험한바 이러스》의 375쪽-407쪽, 445쪽-456쪽 내용의 요약임)

역사교과서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는 80년대 초반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증 과정에서 불거졌다. 역사왜곡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비난이 일자 일본정부는 1982년에 “역사교과서 검정시 근린제국을 배려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2000년 4월 우익세력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를 결성하여 후소샤(扶桑社)를 통해서 역사교과서를 발간하여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2012년 말 일본의 아베 수상이 재집권하면서 역사교과서에 관한 한일 간의 협력은 오히려 결정적으로 퇴보하였다. 아베정권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1974년 유네스코의 권고와 1982년 일본정부의 “근린제국 배려”라는 국제 공약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일본의 각종 역사교과서는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내용을 축소, 또는 삭제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확대하고 있어 과거보다 퇴보한 상태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그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피해를 호소하기가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표면에 등장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특히 피해자들이 아직은 젊은 시절에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88년 4월 윤정옥 교수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1990년 6월 일본 참의원에서 일본정부가 “일본군 및 국가와는 무관하며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답변한 것을 계기로 진실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1991년 8월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1997년 12월 사망)가 생존 위안부로서는 최초로 기자회견을 해서 구두 증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1992년 1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교수가 일본군이 일본군위안부 모집에 관여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관련 공문서를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찾아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



에 착수한 일본정부는 1993년 8월에는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징집과정에서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2차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고노 관방장관 명의 담화」를 통해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이미 국제적으로 “여성의 성노예”문제로 확인되어 UN에서도 중요한 인권침해 사례로 다루어졌고 이에 관한 공식보고서도 수차례 채택된 바 있다. 또한 미국 등 서구의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정치적, 법률적으로 이 문제가 중대한 인권유린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1992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1994년 11월 유엔NGO법률가위원회 보고서 채택, 1996년 1월 UN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UN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위안부’(comfort woman)가 아니라 ‘전시하 군대 성노예제’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어서 1998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 「맥두걸 보고서」를 발표했고, 2000년 12월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 국제법정” 개최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여 2007년 3월16일 아베 정권(1차)은 “정부자료 안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없었다”는 취지의 각의 결정을 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1993년의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비판을 초래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이 공개된 후 2007년 7월 미국 하원은 일본정부에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후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 등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2년 재차 집권한 아베 정권은 재차 역사부정주의적 역사왜곡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2014년 10월 일본 역사학연구회를 시작으로 2015년 2월 미국 역사학회, 같은 해 5월 세계의 수백 명의 역사학자들이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2014 미 의회조사국(CRS)의 미.일관계 보고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관은 제 2차 세계 대전에 관한 미국인의 인식과도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 대신 “강제적인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었다. 2014년 4월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도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끔찍하고 매우 지독한 인권침해”라고 언급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위안부문제 합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양국간 현안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이미 더 이상 한일 양국 정부 간의 합의로 해결될 성격이 아닌 복합적인 국제적 이슈가 되어 있다는 현실을 간과한 결과다. 그것은 피해자 개인의 구제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대략 네 가지 속성을 가진 문제가 되었다. 첫째는 외교 어젠더다. 양국 간 합의는 이에 국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미 여성인권의 침해라는 글로벌 인권 이슈가 되어 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다고 모든 사안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는 제국주의 침탈의 결과라는 역사 교훈이다. 피해자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중요한 역사교육 테마가 될 것이다. 네 번째는 피해자 개인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일이다. “피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일본의 사죄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 분류에 따르면 그 정부간 위안부합의는 ‘외교 현안’ 해결이라는 개념일 뿐이



다.

또한 국제인권법정이나 학계에서 통용되는 ‘사과의 개념’은 “사과(apology)는 자신이 관련된 잘못된 행위를 확인하고 뉘우침(remorse)을 표명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미안함을 표명하고, 배상을 하면서 장래 그러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변화하겠다’고 약속하는 일련의 연계된 행위를 의미한다. 사과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고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돼야 진정성이 입증된다.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용서와 화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합의를 1mm도 옮길 수 없다”는 스가 일본 관방장관의 싸가지 없는 발언도 그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일본은 원래 일본이 잘 하는 방식 그대로 그 합의의 내용을 즉시 부정함으로써 합의를 사실상 당일 날 파기했다. 기시다 외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아베 수상이 사죄의 뜻을 대신 표명했다. 그런데 기시다는 양국외교장관 합의 발표 직후 일본기자들에게 일본이 내기로 한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사죄의 의미를 부정했고 일본의 언론은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일본은 합의 당일 이미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이듬해 1월18일에는 아베총리가 국회에서 “군과 관현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 ... ‘군의 관여’라는 것은 위생관리를 포함한 관리와 설치’뿐”이라며 사실상 자신의 사죄입장을 번복했다. 10월 4일에는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위안부 사죄편지를 쓸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다”라고 말해 스스로 합의 내용을 부인했다. 그에 앞서 합의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2016년 2월 16일에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고위직 외교관인 스기야마 외무심의관(차관보)이 직접 참석하여 “군과 관현에 따른 이른바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 ...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하여 외교실무자도 이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이 사례들은 그럴듯하게 합의문을 만들고 해석은 멋대로 하는 “비단벌레(다마무시) 색깔의 합의(玉虫色の合意)”로 대표되는 일본적 거짓말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은 오히려 ‘불가역’이라는 조건을 부각시키면서 “합의를 준수하라”고 공세를 폈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불가역’이 아니라 가해자가 ‘약속의 불가역’을 외치는 적반하장의 지경에 이르렀다. ‘불가역’이라는 개념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데 적용되는 것이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개념은 아니다. 가해자는 어떤 경우에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가들은 이러한 간단한 개념마저 준수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그 개념을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았다. 2017년 말 발표된 외교부의 위안부합의 검증 테스크포스의 보고서는 일본이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다는 사실을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이 합의를 기화로 역사문제와 관련된 가해자 피해자의 위치가 사실상 역전되어 버렸다. 일본이 약속을 파기 당한 피해자인 척 하게 되었다.

징용피해자 문제

1939년7월 일본정부는 「노무동원계획」에 의해서 식민지 조선인을 일본 본토로 동원해야 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지역적으로 노무자 모집인원을 할당하고 경찰과 군이 그러한 업무를 사실상 수행했다. 이 문제도 결국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배라는 역사문제의 한 부분이다. 1939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조선인 72만 5,000명이 연행됐다. 끌려온 조선인들이 배



치된 산업은 주로 석탄광업, 금속광업, 토목건축업, 제강업이며, 이 중 석탄광업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그리고 광산기업에 송출된 조선인은 탄광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위험한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 1944년6월 시점의 통계에서 의하면 조선노동자의 62%가 탄광에 배치되었다. 헌병의 감시와 군대 조직을 본뜬 직급제가 도입되었고, 불합리한 정신주의가 횡행했다. 탄광에서는 이른바 오야붕·꼬붕이라는 위계질서도 심했고 조선인 일본인 구분할 필요도 없이 일반적으로 상당한 린치가 가해진 것도 사실이다. 전쟁 중의 총력전체제하에서 노동조건은 더 악화되었다. 노동자 재해도 급격히 늘어났다. ‘탄광의 노예노동’은 일본근대화 과정의 어두운 측면의 하나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이들의 체불임금, 저축 등을 일본정부가 ‘변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청구권청산 개념’으로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게 3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1970년대 초반까지 입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정부채권이나 저축 등 명목으로 한국정부가 변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변제를 해주었다. 한국의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 한국정부는 2005년 8월 민관대책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의 무상 3억불 중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 후속대책으로 이들 중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에게는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2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일부 징용피해자들은 우리 법원에 ‘변제’개념이 아닌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판결에 이르게 된다.

* “보상”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다. “보상”이란 정당한 법률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으로부터 “보상” 받을 일은 없다. 그것은 ‘변제’ 아니면 ‘배상’, 또는 배상 성격의 위로금이다.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에 대한 배상”에 관한 재판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 판단기준이 되었다. 또한 당시에는 인권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의 취지에 따라, 일본의 불법행위로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청구권은 일본정부의 임의 재량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따른 것이었다. 2012년 한국 대법원은 “징용을 합법으로 보는 일본사법부의 판결이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우리헌법의 핵심가치와 상충되어 인정할 수 없으며,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식민지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018년10월30일 대법원의 재심 판결은 그러한 법리적 근거를 재차 확인 한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이제까지 일관되게 청구권협정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협정이라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 징용자의 미수 임금이나 반강제의 저축금, 국채는 65년 청구권협정으로 그야말로 완전 ‘변제’되었다.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이 ‘변제’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측이 일본의 식민지지배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이었고, 대법원은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것이다.

사실 일본은 그간 줄곧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의 정부관계자들이나 정치인들은 65년의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정이나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 개념이 아니라는 입장을 국회 답변 기회에 줄곧 되풀이 해왔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대법원의 판결에 반박하려면 식민지지배가 합법이나 불법이나에 대해서만 따지고, 65년 협정에 의해서 한국에 제공한 돈이 그저 무상원조인지, 변제금인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와 학계는 일본에게 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이 ‘무엇이 국제법 위반’이고 ‘법적으로 다 끝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치밀하게 추궁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관리규제 강화조치〉

2019년 7월1일 일본이 한국에게 취한 소위 「수출관리규제 강화조치」는 사실상 역사문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바세나르 체제(WA) 원자력공급국 그룹(NSG), 핵물질과 장비 유입을 규제하는 쟁거위원회(ZC), 미사일통제체제(MTCR) 등 국제수출관리규범은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제조 관련 상품과 기술, 재래식 무기 등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상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 규범이다. “갯치올”제도라고도 한다. 그것은 핵개발 의심국, 테러단체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일본 정부는 국제수출관리규범에 의해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및 외환관리 등 4개 분야 관련 통달(고지?)을 통해 한국을 포괄허가 대상국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한국은 2004년부터 총 27개국인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되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3년 단위로 포괄적 허가를 받는 간편 절차가 적용된다. 반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수출 기업이 매년 수출 계약을 할 때마다 개별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절차상의 불편을 야기하여 사실상 수출규제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수출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아닌 절차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일본은 물론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한 신뢰 문제를 그 근거로 제기했다. 대량살상무기 제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에칭가스)이 북한 등에 흘러들어간 것 같다는 정보를 유포시켰다. 그러나 실체는 역사갈등 문제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였다. 역사문제에서 일본이 적반하장식 대응을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는 아니라면서도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무역관리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언급하여 보복의사를 사실상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조치는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일본의 “괴롭힘(이지메·harrassment)”이다. 이 조치로써 아베 총리는 일본이 한국의 우호국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일본의 힘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다. “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말라(power’s power should not be tested)”는 국제정치의 금언을 어긴 것이다. 한국에게는 이 조치를 계기로 소·부·장 산업의 자립 등 공급망 안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 하고 미리 대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끝.